

드림제주21

계간 제주의정소식지 2016 가을

vol. 14

共感 | 제주국제자유도시
100만 시대를 상상하다

疏通 |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의 명과 암,
정책을 들여다 보다

創造 | 제주남원
의귀마을 4·3길

걸어댕이는 꽃

엿치낙밤 허드랑흔 꿈 몸질로 털어내고
게엿던 꽃섭 거쓴 올명 또시 핀다

나는 아척마다 피어낭 걸어댕이는 꽃
출근질 마당에 땅꽃도 눈 반착 텃다

질긋디 인척 깨어난 잘도 가까운 고냉이술꽃덜
줄쭈러니 둘러앗안 불쏘라 아척놀이다
공원에 지레 큰 자귀낭
아척 산뽕 나산 사름꽃덜 웅상거림에
오모렷던 썸 폐우명 선흥짓 꽃을 받화 든다

민들레꽃 눈 비비명 진 목으로 두릿두릿 혼다
이 시상 꽃덜 건쭈 다 눈텃구나
나 모냥광 향기를 실피 풍기기 위헝영
오늘도 정신 부짱 피영 셔사 혼다

양전형 작 / 제주어 시집<게므르사 못 살리카>

Contents

AUTUMN 2016
•
DREAM JEJU 21
VOL. 14



02 제주어 시
걸어댕이는 곳 | 양전형

06 의장 인사말
공감, 소통, 창조이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신관홍

08 기획특집 제주국제자유도시 100만 시대를 상상하다
제주국제자유도시 100만 이대로 가능할까? | 손상훈
외부 유입 문화와 전통 문화의 상충, 이대로 좋은가 | 문순덕
제주 부동산시장 점검 | 홍수성
농업법인에 드러진 그림자 | 정동성
인구유입에 따른 교육의 문제와 방향 | 이인희
특별한 섬, 특별한 삶 | 안광희
도민이 기대하는 제주국립공원 | 김태운
열린 의회, 제주도민의 목소리를 듣는다

26 제주의마을 만들기
제주형마을공동체 '금능꿈차롱작은도서관'



표지이야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식지 '드림제주21'이 지난 2014년 제13호 발간에 이어 2년여의 공백 끝에 다시 세상에 나왔습니다. '드림제주21'은 도의회의 일방적인 이야기가 아닌 제주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함께해 나갈 도민 여러분의 이야기로 채워집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드림제주21'에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진은 금능꿈차롱작은도서관에서 함께 책 읽는 어머니와 딸의 모습.



30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명과암, 정책을 들여다 보다
시민복지타운 부지에 공공주택 780세대 건설

전문가칼럼

수요자가 원하는 다양한 위치, 소규모 형태가 바람직 | 이창우

36 제주도와의 소통

도민이 신뢰하는 도정과 의정이 되겠습니다

읽을거리

60 Think 우리사회, 인권을 생각하다 | 조백기

61 Hot issue 지진발생 시 10가지 행동요령

62 Hot issue 청탁금지법, 이렇습니다! | 강인태

64 Health 건강을 지키자 | 강형윤

40 테마가 있는 제주의 길 제주남원 의귀마을 4·3길

48 청소년 의정체험

오늘은 내가 도의원, 미래의 제주 내가 이끈다

52 문화리포트 물방울 작가 김창열, 도립미술관 개관하다 | 오수정

54 제주의 신당 송당 분향당굿 | 김승연·김기삼

58 제주어로 쓰는 산문(14) 영화 '물숨' 봄디강 | 김창집

65 Information 임대차 계약 시 유의사항 | 김지현

66 Fact check 사실은 이렇습니다!

67 제주의 젊은작가 | 김시현



공감, 소통, 창조 의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도민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제10대 도의회 후반기 의정이 출범한지도 벌써 4개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새삼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흘러간 시간 속에는 눈에 보이는 변화는 물론 보이지 않는 변화들이 묻어 있습니다. 작지만 강한 의회, 일하는 의회로 나아가기 위한 ‘제10대 의회 후반기 의정혁신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서서히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의회는 제10대 의회 후반기 의정슬로건을 ‘변화와 혁신 도민과 함께 하는 창조 의정’으로 삼고 소통, 창조, 공감의회를 구현하기 위한 의정혁신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정 체감도를 높이는 공감의정’, ‘배려와 협력하는 소통의정’,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창조 의정’이라는 3대 전략과제별로 9개 실천과제와 30개 세부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우선 ‘의정 체감도를 높이는 공감의정’을 위해 도민정책 제안과 조례공모시스템 구축, 도민 정책제안 모니터링을 통해 도민의 의정참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의회 SNS 개설과 의회 인터넷신문 서비스 등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명예기자제도 도입 등을 통해 수요자를 고려한 쌍방향 의정홍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려와 협력하는 소통의정’을 위해서는 의정아카데미를 통해 다양한 의회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의회-도와의 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하여 현안해결에 공동노력하면서 발전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도교육청과의 정례간담회도 정례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전략과제인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창조 의정’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내 오피니언 리더 및 지방의회 전문가 등으로 ‘미래기획 혁신위원회’를 의장 직속으로 설치해 지방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도정 정책현안에 대한 정책자문 역할을 맡길 생각입니다. 인사권 독립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전국 시도 의회 중 제주에만 있는 정책자문위원회에 대한 배치기준을 정비해 활용도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이 가운데 의정역량 강화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예산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을 개방형으로 전환하여 임용했고, 입법기능 강화를 위해 변호사 자격증을 갖춘 전문 인력을 입법정책관실에 배치하는가 하면 홍보분야에도 전문 인력을 충원했습니다.

‘미래기획혁신위원회’를 통한 의회 기획기능 강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정책 아젠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도민에게 의회청사를 개방하고,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의사당 및 의원회관 본관 정비, 승터 조성 등을 통해 도민들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열린 의회로 만들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앞으로도 작은 변화가 큰 혁신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의지와 끈기를 갖고 변화와 혁신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이로 인한 성과가 도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共感

의정체감도를 높이는 공감의정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제주국제자유도시 100만 시대를 상상하다

인구 65만 시대, 행복하십니까?

제주지역 인구는 2010년 57만 7,187명에서 2012년 59만 2,449명, 2014년 62만 1,550명에서 올해 8월 말 65만 5,778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개천절 연휴의 첫날인 10월 1일에는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6만 2,645명으로 집계되면서, 지난 1995년 제주도관광협회가 통계를 잡기 시작한 이후 하루 입도 관광객 6만 명을 돌파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제주를 찾는 인구가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다. 인구 증가와 함께 늘어난 것이 또 있다면 쓰레기 배출량이다. 뿐만 아니라 제주의 상하수도, 교통 등 사회 기반시설은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지난 9월 30일 정부에 제출해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안은 제주의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반영해 환경 자산 보전 강화와 지역과 상생·발전하는 방향으로 과제발굴을 추진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지난 2006년 제정됐다. 이보다 앞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2002년 공포됐다.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제주도를 사람·상품·자본의 이동이 자유롭고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는, 동북아시아 중심 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제주 지역의 개발 계획이다. 제주를 국가 개방의 거점으로 개발함과 동시에 제주도민의 소득 및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한다.

이러한 기본 목표 아래 설정된 7개의 중점 과제는 세계를 포용하는 국제 교류 도시, 일류를 지향하는 문화 관광 도시, 미래를 창출하는 지식 기반 도시, 경제를 선도하는 청정 산업 도시, 사람을 존중하는 복지 중심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녹색 정주 도시, 자연을 중시하는 환경 생태 도시다.

2016년 현재 인구 65만의 섬 제주가 과연 제주특별법이 지향하는 제주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 혹은 제주 본연의 것을 가꾸며 현재를 맞이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때다.

그 중심에 도민의 '행복'이 있는지도 관건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신식 드림제주21에서는 '공감(共感)' 특집으로 분야별 근본적인 문제점과 대책을 촉구하는 분야별 의견을 실었다.

[편집자주]

共感

국제자유도시 100만 시대를 상상하다 ❶



국제자유도시 100만 이대로 가능할까?

글 손상훈 /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원

인구 65만 시대를 점검한다.

최근 제주지역 인구가 내·외국인을 포함하여 65만 명을 넘어섰다. 2013년 8월 인구 60만 명을 넘어선 이후 3년 만이다.¹⁾ 그 사이 자동차 등록대수도 35만 대 수준까지 증가했다. 2013년 8월 자동차 등록대수는 28만 대였다.²⁾ 인구와 자동차가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증가하다 보니 교통혼잡, 주차문제, 교통사고 등 다양한 도시교

통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민들이 경제활동과 일상생활 전반에서 불편과 혼란을 겪는 상황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육상교통 뿐만 아니라 항공 및 해상교통도 마찬가지고, 사람뿐만 아니라 물류까지 비슷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문제의 원인은 공급측면에서 현재 제주지역의 인구와 자동차(특히 승용차)에 의해 발생하는 도내외 통행수요를 교통인프라가 감당하지 못하는데 있다. 여기서 교통인프라는 교통시설, 교통수단 등을 의미한다. 하루 종일 복잡한 제주국제공항, 부족한 대중교통 노선과 긴 배차간격은 공항시설 및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버스의 공급과 운영이 충분치 않음에 기인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교통인프라의 효율적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있다. 교통인프라의 구축 속도가 인구와 자동차의 증가 속도를 따를 수 없기 때문에 교통인프라의 공급과 병행하여 효율적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그간 제주지역에서는 교통혼잡관리, 주차시설관리, 교통수요관

리 등 다양한 교통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했고, 충분한 경험도 없는 상황이다.

비록 늦었지만 교통인프라 공급은 시작됐다. 제주 제2공항 건설, 제주신항만 구축이 논의 중에 있고 대중교통 체계개편이 추진 중에 있다. 또한 도심권에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 중 시급한 구간에 대해서는 우선착공에 들어갔다. 운영효율화를 위한 교통정책과 관련해서도 '제주교통 혁신계획 고고쟁'을 통해 교통문제를 공론화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했고, 내년도 차고지증명제와 연계하여 '제주형 주차융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인구 65만 시대에 걸맞은 교통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교통인프라의 최소한의 공급과 운영효율 향상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제주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민간의 참여와 교통의 산업화이다. 교통은 흔히 공공서비스라고 인식되고 있지만, 공공투자만으로는 어렵고 이는 생산적인 투자도 아니다. 따라서 대중교통 부족, 주차공간 부족문제 등은 민간이 참여하고 산업화를 이루고, 교통산업은 다시 재투자하는 구조로 바뀌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IT 환경을 기반으로 서울에서 시범사업 중인 콜버스, 제주에서 추진 중인 대리주차 사업, 지금은 널리 알려진 차량공유(카셰어링) 사업 등은 충분히 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음과 동시에 전통적인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

제주지역에서 두 번째로 필요한 부분은 교통 빅데이터의 적극적인 활용이다. 지금도 많은 교통 빅데이터들이 수집되어 저장되고 있다. 그러나 교통 빅데이터 활용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활용하여 교통문제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모니터링과 정책의사결정이 요구된다. 또한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를 수집해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제주지역의 교통사고 위험지역을 도민/관광객으로부터 앱을 통해 수집하는 시범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데, 데이터를 수집하여 교통문제 해결에 활용하는 사례라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보다 많은 교통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제주지역은 육상, 해상, 항공교통을 모두 포괄해야 하고, 도민뿐만 아니라 관광객까지 교통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더욱 복잡하고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지역의 경우 대학에서 교통공학 관련 학과가 없어 교통실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이 배출되지 않고, 민간업체도 제



한적이라 교통전문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급증하는 교통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공공부문에서 교통전문 인력의 확충이 타지역보다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현재의 교통문제를 개선하고 인구 65만 시대를 넘어 100만까지 늘어도 수용가능한 교통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교통인프라의 공급, 운영효율 향상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민간의 참여와 교통의 산업화, 교통 빅데이터의 적극적인 활용, 교통전문 인력 확충이 시급히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인구 및 자동차 등의 급증에도 지속가능한 교통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1. 2016년 7월 기준 내국인 635,800명(주민등록인구), 외국인 18,247명. 2013년 8월 기준 내국인 590,450명(주민등록인구), 외국인 10,398명
2. 역외세입차량 제외. 2016년 7월 345,346대, 2013년 8월 기준 279,561대

共感

국제자유도시 100만 시대를 상상하다 ②



외부 유입 문화와 전통 문화의 상충, 이대로 좋은가

글 문순덕 /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제주 인구 백만 시대! 마냥 좋아할 일일까?

최근 몇 년간 제주로 유입되는 인구 증가율은 타 시도에서도 보기 드문 현상이고, 우리들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제주사회는 오래 전부터 이어져온 삶의 가치관이나 풍습이 변형되고 있어, 사람들은 제주에 배어있는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을 제거되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제주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인구(유입 등)와 방문객의 증가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사람 유치 방법을 연구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나 최근 들어 기대 이상으로 인구가 증가하면서 공동체에도 위기감이 나타나고 있다.

사실 제주 문화는 '나 혼자 잘 지키지 않아도 살아남을 것'이라는 착각을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제주도의 인구가 증가(2016년 8월말 기준 655,778명이고, 올해 순이동 인구는 1만 903명임)하면서, 우리들의 가치관을 부정적으로 흔들어 놓고 있다.

문화는 화석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외부 유입 문화와 섞이면서 고유성을 유지할 수도 있고, 전혀 다른 형태로 변하면서 고유성이 상실될 수도 있다. 문화의 변화 요인을 막을 수도 없고, 제거할 수도 없다. 정녕 제주 문화의 색깔을 유지하고, 살아남기를 바란다면 우리들이 그 중심에 있어야 한다.



외부인의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 되며,
내부자들이 제주의 공동체 문화가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데 노력



일부에서는 제주의 전통 문화가 퇴색되고, 외부의 문화 유입에 따른 문화혼종 현상이 나타나서 제주와 제주 사람들의 색깔을 확인할 수 있는 대상이 사라질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있다. 제주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과 개인적 목적에 따라 제주로 이주해 오는 사람들 간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사람이 사는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보편적인 모습이다.

우리들은 제주사회가 적당히 고립되고, 일정부분 전통 문화(언어, 생활, 풍습, 역사 등)를 유지해왔다고 여겼는데, 지역, 마을, 학교 단위에서 공동체 문화의 해체 징조가 표면으로 드러나고 있다. 우리들은 옛것을 일상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생활하고 있는데, 외부인들은 우리들과 문화공유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옛것을 고리타분한 것이라고 공격하면서 자신들의 방식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나타날 수 있다. 물론 사람이 움직이는 곳에서 생활양식이 무조건적으로 변용되는 것을 당연시한다면 고유한 문화, 지역성은 존재하지 못할 것이다.

최근 제주 유입 인구가 증가하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제주 고유의 문화와 공동체 의식이 파괴되고 있다. 자본논리를 앞세우고, 제주 사람들의 정신과 삶을 공격하는 현실 앞에서 우리들은 오로지 '나'의 이익 밖에 모르는 사회로 고착화될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지역 문화의 공존과 공생은 해당 공동체 구성원들의 의무이자 권리로 자리매김될 때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기에 공동체 문화의 해체 징조를 외부인의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 되며, 내부자들이 제주의 공동체 문화가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데 노력하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하다.

제주가 평화롭고, 자유롭고, 안정을 줄 수 있는 유토피아이길 기대한다면 제주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제주의 고유한 색깔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그마한 불편은 감수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할 것이다. 외부 유입 문화와 공존하는 공동체 만들기는 우리들의 가장 큰 숙제이다.

共感

국제자유도시 100만 시대를 상상하다 ㉓



제주 부동산시장 점검

글 홍수성 / 한국은행 제주본부 기획금융팀 과장

요즘 제주경제가 말 그대로 핫(Hot)하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GDP 성장률이 2.7%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제주의 경제성장률은 5%가 넘을 전망이다. 제주경제가 전국과 달리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데는 국제자유도시 추진 등으로 투자여건이 좋고, 관광산업이 호조를 보이는 데다 제주로의 이전기업이 늘어나는 등의 이유가 있다. 이와 함께 도내 인구증가도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이다. 제주는 2010년 이후 인구가 순유입으로 돌아선 가운데 지난해에는 1만 4천명이 넘는 인구가 제주로 이주했다. 2014년에 이미 도내 인구가 60만 명을 넘어섰다. 이러한 인구증가가 민간소비와 주택 등 투자확대로 이어져 제주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성장이 질적 성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날로 심화되는 교통체증 이외에 쓰레기, 상하수도 등의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부동산가격의 급격한 오름세는 도내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부동산가격을 살펴보면 2015년 중 제주도내 주택가격(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 2010년 물량기준)은 2014년에 비해 18%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토지가격 상승도 전국보다 약 3배나 높게 나타났다. 2015년 중 제주의 경매 매각가율이 133.7%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낙찰가액이 감정가액보다 높았다는 점은 제주 부동산시장이 얼마나 과열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부동산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는 인구증가 등 실수요에 따른 부분도 있으나 최근 부동산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향후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에 따른 가수요, 즉 투기수요도 한 몫 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지난 3월에 분석한 주택의 수급상황을 살펴보면, 2015년 중 주택 공급규모(준공실적 기준)는 10,229호로 같은 시기의 실수요(10,005호)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 외의 가수요(6,440호)를 추가로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으며 이에 따른 수급 불일치가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수요 역시 마찬가지다. 실태자수요 이외에 제2공항 건설발표, 주택시장 활황 등으로 투기적 수요가 가세하면서 토지가격이 오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국토교통부의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을 보면 2015년중 19.4% 상승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렇듯 천정부지로 솟는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제주경제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첫째 부동산 가격 상승에 힘입어 가계대출이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향후 가격이 오르리라 기대하면서 빚을 지고 부동산을 구입하는 셈이다. 이로 인해 지난 7월말 현재 도내 가계대출은 10조원에 근접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하지만 이는 유사시 지역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또 다른 문제는 주거비용 상승으로 성장모멘텀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주거비용이 늘어나게 되면 제주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던 인구 순유입과 기업이전 여건이 나빠져서 제주경제의 성장모멘텀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택 수급 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는 2025년까지 총 1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으며 도의회 역시 서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발 벗고 나섰는데 이는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하겠다.

아울러 투기수요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가격안정화에 노력해야 하며 금융기관 역시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 등을 엄격히 함으로써 부동산 연계대출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共感

국제자유도시 100만 시대를 상상하다 ④

농업법인에 그려진 그림자

글 정동성 / (재)제주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짝동 및 비정상 법인 79%↑ 제도와 정책개선 필요

농업법인 제도는 영농의 규모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농업에 기업적인 경영방식을 도입하여 선진된 농업경영 실현을 목적으로 조합 형태인 영농조합법인과 회사형태인 농업회사법인으로 나누어진다. 지난해 말 기준 제주지역에 설립된 농업법인은 2,658개소로 지역별로는 제주시에 1,772개소, 서귀포시에 886개소, 유형별로는 영농조합법인은 1,699개소, 농업회사법인은 959개소가 있다.

제주지역 내 농업법인 육성으로 제주농업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실시한 농업법인 전수 실태조사 결과, 제주도내 등록된 농업법인 총 2,658개소 중 현재 운영되고 있는 법인은 46%인 1,225개소에 불과, 1,402개소는 운영되지 않았고, 법인이 전환된 업체도 31곳이었다고 한다. 더 큰 문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법인 1,225개소 중 422개소는 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257개소는 숙박업이나 음식점, 화물운송업 등 목적 외 사업으로 비정상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는 데 있다. 사실상 제주도내 있는 농업법인 중 정상적으로 운영된 곳은 전체 20.5%인 546개소에 불과했던 셈이 된다.

관련법에 따라 농업법인은 농업과 관련된 사업 외에 숙박업, 부동산매매업, 건축업 등을 할 수 없으며, 농업법인의 소유한 농지는 농업경영에만 사용돼야 한다. 또한 건축 등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토지사용 승낙도 제한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기획부동산이면서 무늬만 「농업회사법인」으로 등록해 운영하는 곳도 적지 않은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필자는 농업법인 정책의 개선방안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농업법인 육성정책의 방향을 새로이

설정할 필요가 있다. 즉 경영형태와 사업유형별로 차등화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가공·유통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은 전문협동조합으로 설립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사업별로 보조지원을 줄이고 장기저리융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종합자금 지원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셋째, 농업법인에 대한 정책지원사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즉 지원대상자 선정에 있어 1년 이내에 사업실적을 낼 수 있다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적이 없다면 사업비를 회수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지원하는 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넷째, 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즉 농업법인의 난립과 부실운영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기에 이의 관리를 위해서도 적절한 교육훈련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농업경영컨설팅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즉 정부정책자금을 수혜받는 전문경영체에 대해서는 경영컨설팅을 의무화하고 실질적인 컨설팅이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경영체에 대해서는 부기기장을 의무화한다.

이제부터 법인의 대표자는 농업을 경영한다는 인식을 확고히 하고 스스로 경영능력을 높여 나가며, 나아가 일반 농가에게도 혁신적인 경영관리 기법을 전파할 수 있는 농업법인의 경영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일부 농업법인의 위법행위로 인해 선의의 농업법인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음을 한번쯤 생각해 보시기를 정중히 권해 본다. 또한 도정에는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시급함에 따라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해 본다.

共感

국제자유도시 100만 시대를 상상하다 ⑥

인구유입에 따른 교육의 문제와 방향

글 이인희 / 제주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라고 함)는 '나홀로 인구증가'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정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인구 100만 시대'를 2025년으로 산정했다. 국가의 힘은 인구, 영토, 자원에서 비롯되고, 인구규모는 지역사회와 국가의 경쟁력 수준을 판단하는 우선적인 지표이다. 2014년 산업연구원은 2012년 이후 제주도는 다시 성장지역으로 진입하는데 소득요인보다 인구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고, 인구유출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타 지역에 비해 교육환경 분야가 열악한 것을 지적했다. 이는 인구요인이 제주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와 인구유입이 제주교육에 주는 영향을 시사한다.

우선 인구유입에 따른 교육문제를 투입과 과정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첫째, 교육의 투입요인은 외부환경으로부터 오는 자극과 인적, 재정적 지원을 의미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1년까지 초등학생 수가 4,000명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며, 2025년까지는 더 많은 학생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2021년까지만 하더라도 21개 초등학교와 1개 고등학교의 교실 증축 및 이에 따른 교원 확충으로 235억 원의 추가재원이 요구된다. 한편, 2015년 제주 인구 변화의 추이를 보면, 2005년에 비교해 고연령층은 제주 전체인구의 13.4%로 증가했고, 유소년인구는 감소하여 15.5%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인구의 구성 분석을 바탕으로, 생애단계별 학습 요구를 충족시키는 맞춤형 평생교육기회 제공, 평생교육기관의 확충과 인프라 구축 및 재정투입이 필요하다. 투입요인의 확충으로 개선된 교육환경은 이주민의 유입을 촉진하고 정주민의 이탈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주도정과 도교육청의 교육협력은 필연적이다.

둘째, 교육의 과정요인은 투입요인을 개인의 변화와 사회적 기여로 전환시키는 학교교육을 의미한다. 다양한 과정요인들이 있으나 핵심은 교육과정이다. 초·중등교육에서는 저소득층,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장애인, 이주민의 자녀들을 미래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사회통합





적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한다. 나아가 교육과정을 수업과 평가로 일관되게 운영할 교사전문성을 신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평생교육 차원에서는 유입인구의 이주 동기를 분석하여, 대상별로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요인의 역할은 투입요인의 효율성과 교육만족도를 극대화시켜 이주민과 정주민의 공동체 발전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제주발 교육혁명을 유도한다.

그러면 투입요인의 우선순위는 무엇이고, 어떠한 과정요인을 연결시켜야 할 것인가? 인구유입에 따른 교육문제는 포괄적이다. 유소년, 청년, 노인, 남자, 그리고 여자도 모두 인구문제의 당사자이자 수요자이다. 한정된 자원을 고려할 때, 지속가능한 인구 100만 시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주민 중심의 출산장려 정책이 필수적이다. 프랑스가 극복한 인구감소의 해법은 보육과 유아 교육서비스의 지원확대 및 사회적 고통분담이었다.

나아가 학교급별 인구교육과 다산장려의 교육서비스가 연계되어야 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3포시대를 취업-결혼-출산-인구증가의 산출 구조로 발전시킬 것이다. 제주도특별자치도의회가 '2025년 인구 100만 시대'를 넘어 '제주교육 100년'을 고민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

共感

국제자유도시 100만 시대를 상상하다 ㉞



특별한 섬, 특별한 삶

글 안광희 / 서귀포귀농귀촌협동조합 이사장

올해로 제주도가 제도로서의 자치도라는 '특별한 섬'이 된지 10년째이다.
그러나 제주는 이미 오래전부터 천혜의 자연환경과 함께 고유하고 독특한 해양문화의
역사 속에서 특별했었다. 이런 제주가 근래에 들어 인구증가에 따른 다양한
사회변화와 현상 속에 새로운 특별함을 맞이하고 있다.

제주 인구 65만 명 시대의 특별한 섬

제주지역의 주민등록 인구는 2016년 9월 말 기준 63만 8,199명으로, 전년 대비 1만 3,804명이 늘어나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 다른 지역에서 제주로 삶의 터전을 옮기는 '제주 살이' 열풍이 올해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음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최근 5년간(2011~2015년) 순유입인구(4만 411명)를 연령별로 분석하면 30~40대가 제주 유입인구의 절반 이상(54.5%)을 차지했으며, 제주 이주 인구의 절반은 경기도(27.5%)와 서울(27.1%) 등 수도권 출신이다.

지난 2010년, 전출자보다 전입자가 많았던 첫해를 기점으로 제주로의 이주열풍은 폭발했다. 대도시의 무한경쟁과 피로한 삶에 지친 젊은 세대와 은퇴 이후 제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사람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시공간적으로 여유로운 제주에서 활동하려는 문화예술인의 이주 등 다양한 이유와 배경 속에서 '특별한 삶'을 쫓아 그들은 제주로 오고 있다.



우린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래왔듯이

영화 '인터스텔라' 대사중에서

제주의 급작스런 인구 증가와 부동산 활황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지역주민과 정착주민의 갈등과 문제를 이야기 한다. 그러나 오랜 문명의 역사 속에서 인류와 사회의 발전은 인구의 이동과 문화의 충돌 등 자연히 발생하는 그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며 이루어왔다. 지역주민과 정착주민간의 첫 번째 단계는 '문화적 소통'이다. 서로가 살아온 공간과 시간을 이해하기 위해 즐거운 문화로 만나야 한다. 두 번째 단계는 '공동체 인식'이다. 제주, 마을에서의 삶은 공동체이다. 문화공동체이고 경제공동체이며 운명공동체이다. 오직 공동체 인식 속에서 우리는 기꺼이 삶을 나눌 수 있다.

마지막 단계는 '새로운 가치창조'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내외적 상황과 함께 제한된 자원 안에서 문화적 소통과 공동체 인식을 가져야 한다. 지역주민과 정착주민은 다양한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창조하며 '특별한 섬'에서의 '특별한 삶'을 함께 만들 수 있다. 제주는 지난 세월 척박한 자연환경을 이겨내고 이보다 더한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자존을 잃지 않으며 생산하고 발전해왔다. 현재의 변화와 현상이 있어 제주도민은 우려와 걱정이 아닌 희망과 도전으로 우리는 모두 새로운 천년을 꿈꾸어야 한다. 영화 속의 대사처럼 '우린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래왔듯이.....'

도민이 기대하는 제주국립공원

글 김태윤 / 제주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올해 제주국립공원이란 화두가 처음으로 제기됐다. 제주에는 1970년에 지정된 한라산국립공원과 5개의 해양도립공원, 그리고 곶자왈도립공원이 있다. 모두 자연공원법에 의해 지정된 자연공원들이다. 제주국립공원은 한라산국립공원을 단순히 확대하는 것도 제주도 전체를 국립공원으로 하자는 것도 아니다. 제주국립공원은 한라산국립공원을 핵심으로 하여 한라산-중산간지역-해안지역-해양을 잇는 새로운 개념의 국립공원이다. 국립공원과 국립공원이 아닌 지역은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섬 전체가 하나의 자연공원을 연상하게 한다.

2002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은 한라산국립공원, 중산간지역(해발고도 200~600m 사이의 지역), 영천과 효돈천, 서귀포 앞바다에 있는 문섬, 쇠섬, 범섬을 포함한 서귀포해양도립공원을 포함

하고 있다. 그만큼 산과 중산간 바다를 잇는 생태축을 연결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초 계획보다 축소되어 많은 아쉬움이 크다는 사람들이 많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람사르 습지 등 4개의 국제보호지역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곳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유일하다. 제주의 자연자산은 이미 국제사회가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2012년 제주에서 열린 제5회 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는 제주도가 발의한 5개의 의제가 화제였다. 자연보전 분야에서 제주가 세계를 리드하는 선도적 위치에 있음을 실감하게 하는 회의였다.

제주에는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자연자산이 널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연결하여 가치 있는 보석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다. 구슬이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이 가슴에 와 닿는다.



도민들은 제주에 분포하는 다양한 자연자산을 잘 꿰어 보석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 제주국립공원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 구상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최근에 자연보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를 했다. 제주지역 자연자산의 가치 증진 방안, 제주지역 국제보호지역의 효율적 관리방안, 해양도립공원의 해양국립공원화, 오름도립공원화, 제주국립공원 관련 기초 연구 등을 수행했다. 금년도 상반기에 오름도립공원 지정에 대해 오름탐방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찬성 58.5%, 반대 41.5%였다. 9월에 유사한 질문에 대해 도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찬성 59.0%, 반대 10.0%, 잘 모름 31.0%로 나타났다. 조사시기와 대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오름도립공원 지정에 찬성하는 의견은 일반도민이나 오름탐방자 모두 6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찬성하는 비율

이 높다는 것에 놀라웠다.

2015년 하반기에 제주의 연안 중에 보전가치가 높은 곳을 해양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도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찬성 65.8%, 반대 9.8%, 잘 모르겠다 24.5%로 나타났다. 오름도립공원 지정에 대해 찬성하는 응답자의 비율과 비슷한 결과이다.

2016년 9월에 제주국립공원 지정과 관련된 도민의견 조사에서 찬성한다는 의견은 87.4%, 반대한다는 의견은 12.6%로 나타났다. 오름이나 해양공원 조사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도민들은 제주의 자연자산을 잘 연결하여 제주국립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제주를 보석으로 만들기를 기대하고 있다. 도민과 함께 제주국립공원 조성을 추진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共感

기획특집을 마무리하며

열린 의회, 제주도민의 목소리를 듣는다



제주도는 전 세계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도시발전과 주거, 환경에 대한 고민과 문제들로 이로 인해 도시에서의 삶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어느 곳보다 급격하게 인구유입이 늘고 관광객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발과 투기에 대한 욕구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제주의 정체성과 공동체 문화, 제주다움을 만들어내는 많은 자연환경이 훼손되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현실화되거나 아직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원주민(선주민)과 이주민(정착민) 간의 갈등과 대립, 양극화에 따른 사회불평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등 다른 도시들이 직면하는 현안들을 지혜롭게 풀지 않는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제주도의 푸른 밤>을 더 이상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제주도민 65만 시대의 도래는 우리에게는 도전이자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직면한 도전을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에 따라 제주의 미래가 밝고 희망찬 유토피아가 될지 아니면 암울한 디스토피아가 될지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구성원들의 차이와 다름이 존재하는 현대사회에서 결국 그 무수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주체도 바로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에 의한 도민 피해사건, 인구유입과 관광객으로 인한 상·하수도, 주택문제, 쓰레기문제, 교통문제 등 우리 앞에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아울러 원주민(선주민)과 이주민(정착민)간의 갈등과 대립, 주거·취업·결혼·출산 등 인생의 많은 것을 포기한 20~30대 청년층, 일과 가정이 양립하기 어려운 여성 등 제주도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현안들을 지혜롭게 풀지 않는다면 제주의 미래는 더 이상 없을지도 모릅니다.



‘변화와 혁신, 도민과 함께하는 창조 의정’이라는 제10대 후반기 의정 슬로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태석)에서는 제주사회의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 이주민, 청년, 여성 등 당사자의 참여와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문제를 드러내고 그 원인을 찾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자 ‘열린의회, 제주도민의 목소리를 듣는다’라는 주제로 연속기획 공감소통 ‘두런두런’이라는 정책담당회를 개최합니다.

11월 예정하고 있는 제1차 공감소통 ‘두런두런’에서는 따뜻한 시선의 원주민(선주민)과 다양한 이유로 제주로 온 이주민 등 제주도 내 각양각색의 당사자들이 참여해 ‘제주도민은 누구인가’, ‘제주이주 열풍의 이유는 무엇일까’, ‘제주 정착의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원주민(선주민)과의 갈등 양상은 무엇인가’라는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그동안 제주가 간직하고 지켜온 마을과 문화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배타적이거나 폐쇄적이지 않고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열린사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제주공동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형식에 있어서도 기존의 교수와 시민사회단체 등 일부 전문가들의 토론회나 공청회와는 달리 모든 참여자가 주요 발언자이자 전문가로서 직접 우리들의 문제를 드러내고 서로의 차이와 다름을 찾아 그 속에서 최소한의 소통과 공감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제주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일정한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여성, 학생·청년, 노인, 이주민, 소외지역 등 그동안 도정의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찾아 그들의 어려움을 듣고자 가칭 ‘찾아가는 의정’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共感

제주의 마을만들기

제주형마을공동체 ‘금능꿈차롱작은도서관’

힘찬 용천수처럼 문화적 갈증 풀어주는 화수분 같은 존재
귀농인·이주민·관광객 등 마을 찾는 이방인들의 문화충전소

글·사진 디자인리더제주

‘차롱’은 대나무를 잘게 쪼개어 납작하게 만든 제주의 전통 그릇이다. 제사 때 친척과 이웃에게 떡과 음식을 담아 나누고, 밭에서 일하는 우리네 부모와 일꾼들의 새참을 담는 도구였다. 차롱은 제주사람들의 정을 나누는 상징물이다.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에 있는 제주형마을공동체 ‘금능꿈차롱작은도서관’도 제주의 차롱처럼 작지만 야무지다. 차롱 앞에 ‘꿈’이 붙었으니 ‘꿈차롱’은 금능마을에 있어 제주도민의 식수원으로 마르지 않는 용천수처럼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는 화수분 같은 존재다. 금능꿈차롱작은도서관은 마을의 아이들의 꿈이 자라는 텃밭이다. 엄마로 살아가는 며느리들이 작가의 꿈을 일구는 탈출구다. 그리고 귀농인이나 이주민, 관광객 등 제주농·어촌 마을인 금능을 찾는 이방인들의 문화충전소이기도 하다. 갈수록 삭막해져가는 현대사회에서 금능꿈차롱작은도서관은 잃었던 사람간의 ‘정(情)’을 매개로 공동체복원의 중심축에서 있다.



꿈을 담고 나눠주는 작은 공간, 꿈차롱 - 마을을 소개하다

금능마을 중간에 위치한 '금능꿈차롱작은도서관(이하 꿈차롱)'은 금능리새마을금고 자리를 리모델링해서 만들어진 마을문화 소통의 공간이다. 문화관광체육부의 작은도서관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2009년 12월 13일 개관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전도사'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꿈차롱은 올해 제주형마을공동체 모다들영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금능마을 소식지를 만들어 낼 준비가 한창이다. 금능리에 정착한 귀농·귀촌인, 이주과정과 관광객에게 마을의 문화와 유적지를 소개하는 것은 물론 현재 진행중인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식지에 담아낼 계획이다.

꿈차롱은 2011년 12월, 도서관의 이야기를 담은 '꿈차롱 가는 길' 창간호를 시작으로 5호까지 발간을 이어갔다. 이후 2014년 9월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학생 10명으로 이뤄진 청소년기자단을 꾸려 기자수업은 물론 NIE교육 등을 벌였고, 그 결실로 책자 형태의 '꿈꾸는 금능'을 만들었다. 연 1회 발간을 목표로 지난해 2호에 이어 올해 3호를 계획하고 있다.

꿈차롱은 신문형태의 소식지가 아닌 많은 마을 이야기를 담은 '그릇'을 장만하기 위해 제주마을공동체 모다들영 공모사업에 신청했다. 조금이라도 필요한 정보를 넣어 소식지를 알차게 꾸미겠다는 의지다. 금능은 다른 지역에서 이주해 정착한 사람들이 많다. 대략 25%를 차지할 만큼 마을 구성원들이다. 하지만 이들은 마을 사람들도 모르고, 마을 홈페이지는 마비되고, 마을의 역사·문화도 몰라 이래저래 정보가 부족한 게 사실이다. 그래서 꿈차롱은 올해 마을 소식지를 문화와 축제, 사람들, 체험·행사 프로그램, 옛 놀이문화 등을 다양한 내용을 소식지에 담아낼 참이다.

현재 꿈차롱은 현장에서 취재하고 편집하는 청소년 5명과 성인 5명으로 기자단을 구성하고, 제주지역 언론사 현직기자를 강사로 초청해 2회에 걸쳐 기자수업을 진행했다. 10대부터 70대까지의 놀이문화를 알아보기 위해 도서관으로 각 세대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 대담을 가졌고,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경로당을 찾아 인터뷰를 하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다.

옛날 놀이는 무엇이고 어떻게 놀았는지에 대해 정감어린 이야기로 풀어간다는 것이 취재의 맥락이다. 옛 놀이문화를 통해 마을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함께 활동하며 토박이와 이방인 사이의 벽을 허문다는 구상이다. 스마트폰에 중독된 아이들에게 새로운 놀이문화를 알리고 예전처럼 들로 바다로 뛰어다니는 건강한 놀이문화를 전파해 웃음소리가 가득한 마을을 만든다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곧, 닫힌 공동체를 열어 서로를 알기 위해 한발 다가서는 공통 관심사를 만들어 보급한다는 것이다. 옛 놀이문화는 앞으로 도서관에서 운영할 프로그램의 소재로 활용한다는 포부다.





답답한 도서관 밖으로 내달리는 꿈차롱 - 아이도 어른도 반했다

꿈차롱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책을 빌리고 읽는 공간이 아니다. 마을의 아이들이며 어른들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는 도서관이라는 공간이 너무 좁다. 그래서 꿈차롱은 일탈을 시작했다. 마을 곳곳에 그간의 결과물이 목격된다. 도서관 입구 도로에 커다란 문어가 살고, 돌담에는 형형색색이 알록달록한 소라와 보말(고둥)이 붙어산다. 심지어는 마을도로 위엔 불가사리와 물고기들이 아스팔트 위를 헤엄치며 다닌다. 아이들의 상상력이 도서관 담장 밖을 넘어 농어촌인 금능마을을 온 마을을 용궁으로 만들었다.

집집마다 걸려 있는 문패도 보는 재미를 더한다. 아이들이 쓴 동시에 그림을 그려 놓았는데, 그 엉뚱하고 기발한 발상에 누가 살고 있는지 대문을 열어 확인해 보고 싶은 정도다.

꿈차롱이 문화예술재단의 디딤돌 사업의 지원을 받아 지난 3년간 시화(詩畵)문패사업의 결과물이다. 전문가의 손이 닿았다면 애착이 없었을 것이다. 손자가 만든 거라 팔순 할머니가 애지중지하며 교통사고를 당해도 눈이 내리는 날, 밖으로 나와 손으로 눈을 쓸어내는 그 정겨움과 애뜻함이 오롯이 전해지는 어느 예술품과 견줄 수 없는 보물이다. 채색이 어려운데, 아이들만 했을까. 엄마-아빠의 도움을 받아 고사리손으로 그려낸 그림문패는 사랑하는 가족의 정성이 담긴 소중한 가족사진일지도 모른다. 자긍심과 애착은 보다 진한 가족애를 만든다.

꿈차롱은 시화문패사업과 결연인 제주어시를 '제주어 지킴이' 뚜럼 박순동 아저씨의 도움을 받아 자작곡을 만들어 음반을 제작하기도 했다. 또, 제주설화그림책 '제주말로 고라보는(말해보는) 제주이야기'를 지난해 발간했다. 2015년 꿈다락토요 문화학교 공모사업에 선정돼 진행한 프로그램의 결과물로 꿈차롱의 아이들 15명이 직접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려 완성했다. 꿈차롱의 일탈은 여기가 끝이 아니다. 자연에서 노는 것. 대나무뉘시를 하고, 열매를 따서 얼굴에 바르고, 풀피리를 불고, 잠자래채를 만들어 곤충채집도 하고 그러기를 1년 프로그램으로 운영했다. 이렇게 살아있는 도서관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 제주시 동쪽마을인 조천에서 서쪽마을인 금능까지 1시간30분 가량 버스를 타고 오는 친구도 있다고 한다.



도서관 주변 돌담에 걸려있는 시화(詩畵)문패

진정 어린이들도, 어른들도 참되고 재미있는 삶을 사는 돌파구를 꿈차롱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건강한 놀이문화, 아이에서부터 어르신들까지 한데 어우르는 마을 공동체가 꿈꾸는 구심점 역할을 해내고 있다. 농사를 많이 짓는 농부의 이야기, 최고령 해녀 할머니의 이야기, 마을신당 이야기는 소식지에 담겨 이방인들에게 친근감을 동반한 신비감으로 다가선다.

꿈차롱은 30~60대 여성 32명(토박이 16·이주민여성 16)으로 공동체를 꾸려 소통 프로그램을 이어가고 있다. 원예, 바디테라피, 제주토속음식 요리교실을 열어 이주여성들이 정착하고 제주문화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그 뿐인가. 요즘 가요교실과 마을 특산물을 내다파는 플리마켓도 호응을 얻고 있다. 시창작교실과 동화구연교실을 통해 금능마을의 엄마들은 작가로 등단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잃었던 자신의 이름을 되찾아가고 있다. 끝없이 솟아나는 맑은 용천수처럼 꿈차롱은 문화적 갈등을 풀어주는 소통의 공간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양민숙 꿈차롱 관장이 없었다면 모두 불가능한 일들이었다. 현재 시인으로 활동 중인 양 관장은 (사)색동회 제주지부장으로 활동하며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놀이체험활동과 함께 어른들을 위한 시와 소설창작, 동화구연 등을 풀어내며 재능기부하고 있다. 금능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금능 사람과 결혼해 살고 있다. 고향에 대한 애뜻한 사랑과 애정이 마을 공동체를 살리는 원동력으로 삼고 있다. 그 보람있는 일에 꿈차롱 사서로 활동 중인 홍정임씨와 이윤영씨가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해내고 있다.

하얀 백사장 너머로 한가로이 떠 있는 비양도. 그 천년의 섬을 바라보며 서 있는 꿈차롱은 시와 문학길, 생태미술길, 미니야외책장 운영으로 마을에 문화의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본질은 문화만이 아니다. 마을 사람들의 마음 깊숙이 감추고 있던 따뜻한 사람에 대한 배려, 그 정을 표출할 수 있도록 도약이고 있다. 바다내음을 가득 품은 가을바람이 문화의 바람으로 변해 금능마을을 포근하게 휘감는다. 꿈차롱은 정감어린 공동체 복원이라는 그런 '바람'을 고대하고 있다.

꿈차롱에서 펴낸 도서



1. 마을사람들의 창작문학집
2. 아이들이 직접 그리고 쓴 제주설화그림책
3. 아이들이 직접 쓰고 작곡한 시·노래 음반CD
4. 도서관의 이야기를 담은 '꿈차롱 가는 길'



疏通

배려하고 협력하는 소통의정

시민복지타운 부지에 공공주택 780세대 건설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의 명과 암, 정책을 들여다 보다

제주도는 시민복지타운 부지(4만4000㎡)에 공공주택 780세대(행복주택 700세대, 실버주택 80세대)를 건설하되 인근 광장과 연계한 공원, 공공시설이 복합적으로 들어서는 방식으로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12월까지의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 내년 2월까지 도의회 협의 및 전문가 토론회, 도민 의견 수렴 등 공감대를 형성한 후 3월에는 설계공모 등 행정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도의 계획과 함께 도의회가 마련한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 그리고 전문가 칼럼을 통해 도민과의 소통의 기회로 삼고자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9월 21일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행복주택 공모에 응모한 결과 제주 시민복지타운 700세대를 포함한 함덕 54세대, 한림 22세대, 삼도2동 36세대 등 812세대를 공공하는 계획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복주택 공모에는 전국 100개 지구에서 2만5008세대를 신청했으며, 제주를 포함한 42개 지구, 9168세대가 선정됐다. 제주도는 앞으로 행복주택 700세대에 실버주택 80세대를 더한 780세대를 시민복지타운에 짓는다. 이는 당초 계획된 공급 규모보다 줄어든 것이다. 제주도는 시민복지타운에 10년 임대 후 분양이 가능한 420세대도 지을 예정이었지만 검토 끝에 이 같은 계획을 포기했다. 행복주택은 사회초년생·신혼부부·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위치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며, 입주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5,393천원(4인 기준)으로, 대학생은 재학생, 대학·고등학교를 졸업·퇴학한 후 2년 이내인 미혼 무주택자(본



인 부모합계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이며, 사회초년생은 취업 5년 이내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미혼무주택자(본인소득이 평균소득 80% 이하), 신혼부부는 재직 또는 재학 중인 예비 신혼부부 및 결혼 5년 이내 무주택 세대구성원(세대소득이 평균소득 100% - 맞벌이 120% 이하), 20%는 저소득층, 노인층의 입주가 가능하며, 사업비의 70%(국비 30%, 기금 40%)가 지원된다.

제주도는 시민복지타운은 지난 2002년 도시계획재정비 시 공원에서 시청사로 변경 후 추진 과정에서 여러 여건상 시정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근주민 등 조기 활용 방안 수립 후 시행요구 등 지속적으로 민원제기 등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있어 그 동안 관광환승센터, 비즈니스센터, 쇼핑아울렛 등 여러 가지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한바, 공공목적 타당성 등 결여로 무산되는 등 10여년 이상된 본 부지의 활용 방안으로 44천㎡의 부지에 공원, 공공시설과 연계해 구상



하게 됐다. 공공주택 저층부는 공공 커뮤니티시설, 상층부는 공공주택 공간으로 계획하는 한편, 주차장을 지하화하여 지상에는 녹지 및 부대시설과 공원과 연계개념으로 계획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제주도는 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다음과 같이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첫째, 공공성격이 강한 도심공원화 요구사항은 인근 광장과 연계한 공원개념으로 추진하고(광장, 공원 확대), 일 정면적을 공공시설 부지로 존치하고 공공주택은 저층부에 도서관, 어린이집 등 공공 커뮤니티 시설 및 주거공간과 연계한 공공성을 확보해 토지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것.

둘째, 고밀도로 인한 경관 및 환경문제는 10년 공공임대주택(420세대)을 제외하여 800여 세대로 사업량을 축소함으로써 분양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한편 경관 및 환경문제를 최소화해 나갈 것.

셋째, 학교문제는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이 입주하는 행복주택 등으로 학생수의 증가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나 교육청과 충분한 협의를 해나갈 것.

넷째, 도민이 우려하는 교통문제는 입주자 및 공원 이용자 등을 감안한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며, 인근 이도초등학교에서 신제주(중앙중학교)로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를 조기 개설과 계획과정에서 제시되는 교통영향분석을 통해 저감 대책을 마련해나갈 것.

다섯째, 공론화 없이 국토교통부 공모 신청을 하는 등 성급히 추진한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공론화 이후 공모신청을 하여야하나 공공주택건설이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어 지방비로만은 건립에 한계가 있어 부득이국비 등 재원확보(국비·기금 70%) 차원에서 먼저 공모 신청(7월)을 하게 되었으며 다른 지자체인 경우에도 행복주택 공모 확정 후 행정절차 등을 진행.

제주도는 내년 2월까지 도의회 협의, 전문가 토론회, 간담회, 워크숍 등으로 공론화를 거치면서 도민의 의견을 수렴, 내년 2월부터 연말까지 설계공모, 실시설계, 교통영향분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과정에서도 계속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시민복지타운 시청사부지 활용방안과 행복주택 토론회

일시: 2016년 9월 30일(금) 15:00 장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주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시민복지타운 시청사부지 활용방안과 행복주택’ 토론회 열려

제주도가 시민복지타운 시청사 부지에 공공주택을 건설키로 하고 도민 의견 수렴에 돌입한 가운데, 도시계획 및 지역 균형발전 측면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태일 제주대학교 교수(건축학과)는 9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주최한 ‘시민복지타운 시청사부지 활용방안과 행복주택’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먼저 시민복지타운 입지와 관련해 제주 시내 공공부지로는 규모와 입지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장소로, 도시계획 측면에서 볼 때 활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특히 구제주와 신제주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서 시민의 편의성 확보에 용이할 뿐 아니라 도시의 상징성을 갖는 시청사 입지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원도심과 인접해 있어서 만약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할 경우 도시재생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인근 이도주공아파트 재개발과 맞물려 육아·교육시설 신축 등 불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 등 사회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대규모 대단위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보다는 소규모 주거단지를 지역으로 분산해 그 지역의 정주환경에 맞는 주거단지를 조성해 주거복지와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거시적 안목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시청사 부지 활용과 관련해서는 △시청사 부지로 유보해 현재와 같이 개방공간으로 활용 △도심 녹지공간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대표 시민대공원으로 조성 △시청사와 소규모

집합주택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개발 등 보다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제주도가 지향해야 할 주택정책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원칙은 물량 중심의 택지 및 주택 공급, 도시권 중심의 주택공급 정책에서 탈피하라는 것이다.

김 교수가 제시한 주택정책 방향으로는 자가(自家) 중심의 공급보다는 공공임대 중심의 주택 공급, 읍면지역 중심의 개발을 통한 인구분산 및 지역균형발전계획과의 연계, 마을공동 소유 토지나 공유지를 장기 임대해 제주도 또는 LH가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 등을 제시했다.

또 읍면지역의 경우 주거공간 공급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 여가, 복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합적 기능의 시설로 개발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원도심의 경우는 도시재생 수법으로 주택을 공급하되 소공원 및 문화공간 조성, 골목길 활성화와 연계한 개발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특히 주택가격에 큰 영향을 주는 토지 문제를 해결을 위해 ‘제주형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을 도입할 것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이란 토지를 임대해 공급하는 주택으로, 과거 행정이 100% 투입하는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민간이 공공의 토지를 임대해 건축하는 것으로, 민간시행기관 입장에서 민간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주거 관련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비영리단체 등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나설 수 있을 것”이라며 “제주도의 경우 리단위 소유 토지를 적극 활용해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성수 제주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도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토론에는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원, 고운봉 제주도 도시건설국장, 이성용 제주발전연구원 박사, 송종철 제주주거복지포럼 이사장, 김군학 이도2동 주민자치위원 등이 참여했다. 주거복지정책으로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면서도 왜 하필 시민복지타운이 입지여야 하는가 라는 점에 있어서는 의견이 크게 분출됐다.

김군학 주민자치위원은 “시민복지타운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면 행복주택 건설은 맞지 않다”면서 “행복주택이 건설되면 이 일대는 교통문제는 물론, 가뜰이나 이도2동 지역의 학생수가 급증하고 있어도 학교 지을 부지가 없어서 하는 판인데 행복주택까지 들어서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민복지타운 내 분수대와 광장 등이 있는데 앞으로 행복주택이 지어졌을 때 시민들이 과연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겠느냐”면서 “행복주택 700세대와 실버주택 80세대를 이곳에 건설한다는 계획을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결국 행복주택은 이 지역의 교통환경 등을 더욱 악화시키는 난개발로 이어질 것이 자명해 철회돼야 한다”면서 “또한 제주도는 시청사 부지를 도 소유지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바라봐야 하고, 따라서 공론화 과정을 먼저 거치고 의견수렴을 해서 시민의 뜻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학 의원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도지사나 관계공무원 등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노고는 잘 알고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은 공론화가 필요한 사안이다”며 ‘선(先) 정책결정, 후(後) 의견수렴’의 방식을 택한 제주도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과연 해당부지가 행복주택 입지로 적절한지에

대해 제대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행복주택의 국비 예산확보를 위해 (선 정책결정을) 그랬다고 하지만 이 역시 이해할 수 없다”면서 “행복주택이 대학생과 신혼부부,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라면 굳이 시민복지타운을 고집할 필요가 있다. 대학이 있는 아라동과 같은 지역도 입지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결론적으로 “제주도는 전국 최고의 행복주택을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이곳이 전국 최악의 교통지옥이 될 수 있다”면서 시민복지타운 입지 결정을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고운봉 도시건설국장은 행복주택 건설의 당위성을 강조한 후, “행복주택은 국·공유지여야 하고, 교통이 편리한 접근성이 좋은 곳이어야 한다”면서 “그래서 시민복지타운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고 국장은 이어 시민 공론화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해, “선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국비와 기금이 지원되는 행복주택 공모가 진행되면서 사업 재원을 먼저 확보해야 해 공모를 먼저 한 것이고, 이후 의견수렴 등 공론화를 하자는 것이었다”면서 “어느 것이 먼저냐는 데에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나 자원확보 때문에 불가피한 점을 이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공론화 과정은 분명히 거치겠다”고 말했다.

고 국장은 또 도심지 녹지공간 또는 공원으로 남겨둬야 한다는 의견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행복주택 옆 녹지공간과 연계해 공원으로 조성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또한 앞으로 마스터플랜을 통해 도민들이 공감하는 계획을 수립해 제시하겠고 이 과정에서 교통문제 대책도 내놓겠다”고 말했다. 특히 토론자로 나선 이성용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의 입지 타당성은 검토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건물 배치 등을 통해 기존 공원까지 포함, 3만㎡ 이상의 공간을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송종철 제주주거복지포럼 이사장은 “공공임대주택 수요조사와 수요자들이 도심지에 거주하는 이유 등을 검토해야 하며, 사회적 취약계층 1%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도민 전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능동적 공론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도민 대상 공론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시민복지타운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부터 공론화해야 한다

토론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후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결국 도정의 계획대로 따라오라는 것 아니냐”, “시민복지타운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부터 공론화해야 한다” 등 부정적 의견을 쏟아냈다.

특히 도남동에 거주하는 주민자치위원 김민건 씨는 “행복주택 정책에 대해 공감한다”며, “그러나 도남동은 이미 재건축 등으로 포화상태다. 700세대 입주에 따른 교통과 학교 문제도 있지만 기존 주민과의 소통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 마을구성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또한 “제반시설 등이 잘 갖춰져 행복주택 건설부지로 적합하다는 제주도의 발표는 탁상행정”이라며, “오랫동안 살아 온 주민들의 삶을 헤아리는 행정을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하민철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건설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하 위원장은 “시민복지타운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된 지도 벌써 10년이 지나고 있으나 시청사 부지는 방치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러한 현실 속에서 도정은 행복주택이라는 대안을 제시했으나 행복주택,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도민사회의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 위원장은 “제주도의 정책의사 결정에 도민의 의견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정책결정 전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제주도정의 공공주택 건설 결정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신관홍 의장도 개회식에서 “문제는 정책을 발표하는 과정에 도민 공론화 절차가 많이 부족하다는 점”이라고 지적한 후, “물론 요즘 인구 급증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급등하면서 공공임대 주택수요가 커진 것은 맞으나, 하지만 하필 제주시에서 마지막 남은 대규모 공유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해야 하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며 행복주택 건설에 대한 합리적 진단과 검토를 촉구했다.



수요자가 원하는 다양한 위치, 소규모 형태가 바람직

글 이창우 / 한국지역개발연구소 소장



각종 지표에서 나타나듯이 소득 양극화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저금리 기조로 인하여 주택가격 상승으로 서민의 주거 불안을 가중시키고, 전세물량 감소로 주택가격보다 더 치솟는 전세가격 상승은 전세대란으로 서민들의 주거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한 전세에서 월세로의 주택 임대시장 변화는 주거비부담 증가로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불안정은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불안한 서민들의 주거안정 확보를 위한 주거정책의 가장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서민층, 청년층 등 주거안정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행복주택, 창업지원주택, 청년 전세임대주택, 공공실버주택 등 다양한 주거안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하여 5년 단위의 공공주택 공급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해 중기 단위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관리 방향을 마련하고, 매년 11만~12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아직까지 5%대인 전체 주택 대비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을 2022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8%까지 공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각 지자체에서도 건설비용의 최대 30%까지 국고보조금의 지원을 받고 주택도시기금 융자도 저리에 받을 수 있는 행복주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좋은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이지만

건설 추진 시 상당수의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가로막혀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 목동의 경우 유수지에 '행복주택'을 짓기로 계획 하였으나 주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행복주택' 지구지정 취소 소송까지 제기하여 결국 지구 지정이 취소되었다.

사회공통적인 의견으로 임대주택공급 확대에는 필요성을 느끼고, 꼭 필요한 시설로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 지역에 들어서는 것은 강력히 반대하는 님비(NIMBY(Not In My Backyard))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주민들의 전 재산인 집값과 직결되는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님비현상을 보이는 지역주민을 무조건 비난할 수는 없다.

제주도는 처음부터 행복주택을 공론화하고 주민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이 부족했던 것 같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행복주택 공급 시 다양한 생활·복지서비스 등을 결합시킨 공급으로 주민들이 원하고, 주변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나 국공립어린이집, 문화센터 등의 시설을 함께 건설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정책적 지원방안에 대한 고민과 청년층을 위한 주택이 들어왔을 때 해당 지역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설득한다면 오히려 주변 주민들이 반기며, 서로 '행복주택'을 주변에 유치하고자 하는 핼피(PIMFY(Please In My Front Yard))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대량공급이 아닌 수요자들이 원하는 다양

한 위치에 사회주택, 매입임대주택 등을 적극 활용하여 소규모로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주택공급이 된다면, 보다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며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함께 주변 주민들과 융화된 본연의 Social Mix가 가능할 것이다. 입지적인 측면에서 제주지역에 선정된 행복주택 입지는 제주시 도남동 시민복지타운(700세대), 제주시 삼도2동(36세대), 한림읍 한림리(22세대), 조천읍 함덕리(54세대) 등 모두 4곳 812세대이다. 제주도내 행복주택 입지가 대부분 제주시 동지역으로 읍면 지역은 한림·조천읍 각각 1곳뿐이고, 서귀포 지역도 혁신도시 1곳이다. 이렇게 행복주택 공급이 제주시 동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읍면 지역과 서귀포 지역 인구 분산 및 균형 발전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수요가 많은 곳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본연의 목적은 앞서 이야기 했듯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확대이다. 이를 위하여 국가에서 계획되고 있는 5년 단위의 공공주택 공급 및 관리 계획과 같이 체계적인 제주도의 권역별 공공임대수요 분석을 통하여 소외되고 있는 서귀포와 읍면지역의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확대와 연도별 공급방안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연령별, 지역별 구분 없는 모든 저소득 제주도민들의 주거안정 확보가 절실하다.

疏通

제주도와의 소통





도민이 신뢰하는 도정과 의정이 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제주도는 8월 4일 오후 5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정책협업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7월 가졌던 제10대 후반기 신임 의장단과의 면담시 제주도와 도의회 간 정책협조 강화 방안을 논의한 직후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는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제주도 주요 실국 부서장이 자리했고,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에서는 신관홍 의장을 포함한 부의장단, 각 상임위원장 등이 대거 참석했다.

주요 안건은 △도-도의회간 정책소통 강화 △청탁금지법 시행 등 새로운 청렴환경 공동대응 △제주교통혁신계획 '고고생' 추진 등이 다뤄졌다.

신관홍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10대 제주도의회 전반기에는 제대로 정책간담회가 이뤄지지 못했는데, 하반기 들어 첫 간담회를 갖게 돼 의미 있게 생각한다”면서 “오늘의 만남이 소나기 비 같이 도정과 의정의 시원한 대화가 오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신 의장은 “이렇듯 저렇듯 도나 의회는 도민을 위해 존재한다”며 “도민이 주인되고, 도민을 위해 모든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뜻을 잘 헤아려야 좋은 정책이 반영될 것이고, 그래야만 도민들도 도정과 의정을 신뢰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해 3월 정책협업의회가 열렸고, 그 사이에 다른 형식의 만남이나 교류, 토론 등이 있었지만, 제주도의 주요 간들과 도지사 등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1년 5개월만이어서 매우 다행스럽고 뜻깊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원 지사는 “앞으로 정책소통 강화하고 다방면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오늘 협의를 시작으로 국비확보 등 정책 공조를 강화하고, 각 상임위별로 사전에 정책과 사업을 더 상세하게 설명할 일이 있다면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며 “논의되는 사항들 매우 진지하게 반영하고 도와 의회가 모범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도의회, ‘도민대통합, 지역균형발전 협력’ 선언



신관홍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과 원희룡 도지사는 9월 20일 오전 10시30분 도청 기자실에서 ‘도민 대통합,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제주도-제주도의회 공동협력 발표문’을 발표했다. 도정발전의 동반자로서 협치의 정신을 살려 다양한 지역현안을 슬기롭게 극복하자는 취지다. 공동협력은 크게 세 가지 틀에서 진행된다.

먼저 정책공조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조례에 분기별로 개최기로 된 정책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사전 정책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도민 다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해법모색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두 번째로는 공동현안 해결에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인구·관광객 증가에 따른 생활쓰레기, 환경, 대중교통, 도민의 삶의 질 향상, 개발과 보존의 조화, 주거복지, 청년 일자리 창출, 품격 있는 시민정신, 미래세대 양성 교육 등에 대해 정책대안을 모색하고, 도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세 번째는 갈등해결 및 지역균형발전, 제주미래비전인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만드는데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신관홍 의장은 “전반기에 다소 매끄럽지 못한 도-의회 관

계에 대해 도민들로부터 많은 얘기를 들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많이 고민했다”며 “(도에서)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의회와의 공조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렸더니 그렇게 하자는 화답이 있었다. 그렇다고 의회가 견제·감시 기능을 포기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잘못된 부분은 정확히 지적하되 도민행복을 위한 일에는 힘을 합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동협력 발표문이 탄생하기까지는 김태석 의회운영위원장과 김정학 기획조정실장이 파이프라인 역할을 했다. 김태석 의회운영위원장은 “전반기에 대한 반성과 협치의 복원을 위해 제가 제안을 했고, 기초실장과 수차례 만나면서 발표문을 정리했다. 발표문에는 완곡한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행간을 읽어 달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1년9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와 관련해 의원정수 및 선거구 조정을 위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최대한 빨리 구성, 가동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원 지사는 “도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전제한 뒤 “우선은 T/F로 출발했는데, 구속력을 갖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가급적 빨리 구성,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히 협조하겠다.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분란의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도-도의회 정책협의회 통해 태풍 피해보상 사각지대 해소 공동협력

지난 10월 20일 도청 4층 탐라홀에서는 제10대 의회 후반기 두 번째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제18호 태풍 차바 피해 사각지대 해소 대책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주요 안건은 제18호 태풍 차바 피해 복구 추진계획과 2017년 예산편성 방향 및 달라지는 사항, 2017년 국비확보를 위한 도-도의회 총력대응 추진 등 여러 현안들에 대해 도정과 도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원희룡 지사는 태풍 차바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나가는 과정에서 의회가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 협조해 준 것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내년도 예산편성에 앞서 적극적인 위기관리와 미래 지속적이고 안정 가능한 도정 역량의 긴밀한 논의와 협력이 필요하다. 국비 확보를 위한 공동의 노력도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사안으로 이를 위해 제주 전체 역량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역할로 서로 노력해가면서 제주가 내년에는 새로운 시대를 향한 희망을 구체적으로 펴나갈 수 있도록 자세를 가다듬고 의회와의 협력태세를 더 구체화하고 강화하겠다.”고 했다.

신관홍 의장은 “모든 일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면서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제주도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한시름 놓기는 했지만, 대부분 도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사유시설 피해가 크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상심하지 않도록 피해복구를 위해 발빠른 조치가 있어야 한다. 특히 저류지가 제 역할을 못했다는 지적이 많은데 냉철한 진단을 통해 미래를 내다보는 설계가 이뤄져 다음 피해가 되풀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며, 인구 증가와 관광객 증가로 인해 쓰레기·상하수도·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 예산 더 많이 투입돼야 하기에 의회도 긴급현안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력과 제주 현안 해결을 위한 허심탄회한 논의가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創造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창조 의정





제주남원 의귀미를 전경

創造

테마가 있는 제주의 길



치유와 상생, 그리고 평화를 염원하는

제주남원 의귀마을 4·3길

글·사진 디자인리더제주

동네 어귀에 신목(神木)처럼 마을을 지키는 팽나무. 제주사람들의 겪은 온갖 시련과 애환을 지켜보며 바람이 불 때마다 모세혈관처럼 뽀은 잔가지들은 오래된 마을의 역사를 낮은 목소리로 말한다. 짙은 녹색의 팽나무는 4·3길의 상징이다. 제주4·3의 아픔을 당당히 극복하고 아름다운 제주, 평화로운 제주,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제주공동체 복원의 의미를 함축한다. 상징띠는 붉은색과 흰색띠로 한조를 이뤄 4·3의 길을 안내한다. 붉은색은 정열과 희생, 진실이다. 흰색은 순결과 결백, 그리고 평화를 의미한다.

초가을을 지나 10월의 문턱을 넘어서며 제주 들녘에는 억새가 한창이다. 한라산 허리, 돌무더기마다 피어나는 억새를 보고 있노라면 제주4·3사건이 연상되는 이유는 뭘까. 그것은 수많은 억울한 영혼들이 제주 땅에서 이유없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일 게다. 그래서 억새꽃이 피어날 때면, 유독 하얀 속살에 피딱지처럼 붙어있는 붉은 화분이 선명하다. 그 뿐인가. 억새 줄기의 속에도 붉은 피가 서려 마치 그날의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억새는, 바람이 불 때면 가녀린 자태에도 위태롭지 않게 서서졌다 다시 허리를 세우는 강인한 제주사람들과 많이 닮았다.



01

서귀포시 남원 의귀리의 동백꽃처럼 붉은 눈물



남원읍은 동백마을로 유명하다. 예술인들은 4·3사건의 피해자들을 동백꽃으로 형상화한다. 모진 겨울을 이겨내며 붉게 피어나는 동백꽃은 아름답다고 표현하기 보다는 혹독한 자연 속에서 말없이 이 땅을 지켜온 제주사람들의 모습이다. 꽃잎 하나하나 떨구는 여는 꽃들과는 달리 동백꽃은 차디찬 대지로 눈물처럼 송이째로 뚝뚝 떨어진다. 말없이 희생당한 숭고한 영혼들이 올해로 벌써 69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할아버지·할머니이고, 부모이며, 형제·자매였기에 더욱 애잔하다.

지난 9월,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마을에 4·3길이 개통됐다. 지난해 안덕면 동광마을 4·3길에 이어 두번째다. 세번째는 조천 북촌마을 4·3길이다. 조만간 개장돼 너븐숭이, 문주기알 희생터, 순이삼촌의 이야기를 들려줄 참이다.

의귀마을은 남쪽으로 녜시오름이 아담하게 솟아있고 마을 주변으로 서중천과 의귀천이 굽이치는 곳으로 중산간에 위치한다. 조선시대 중엽 나라가 위협에 처했을 때, 1300여필의 말을 조정에 바친 '헌마공신' 김만일의 고향으로 '의귀'는 임금님이 내린 옷이라는 뜻으로 '귀한 옷'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유서가 깊은 마을이다.

의귀마을은 일제강점기 1926년까지 서중면사무소가 있었던 남원읍의 중심마을이다. 4·3사건이 한창이던 1948년 11월 초순, 의귀주민들은 다른 지역보다 일찍 시작된 군경 토벌대에 진압작전으로 한순간에 삶의 터를 잃게 된다. 이들은 인근 오름과 숲, 궤 등에 숨어 살거나 산으로 피할 수밖에 없었다. 토벌대에 의해 많은 주민들이 잡혀 희생되거나 육지 형무소로 보내지며 그 아픈 역사는 그 후손들에게 이어지고 있다. 대다수는 아직도 생사를 알 수 없는 4·3행방불명인으로 남아 있다. 당시 희생자만도 250여 명에 이른다.

02



- 01 장판거리를 걷다보면 4·3길의 상징띠가 보인다.
- 02 김만일묘의 전경

01



02



03



04



발길 닿는 곳마다 아픈 역사의 흔적들 오롯이

의귀마을 4·3길 탐방은 의귀마을 구석구석을 돌아보는 순례의 길이다. 싱그러운 자연이 맞아주는 숲길과 다르고, 사람 냄새와 자연이 공존하는 길인 올레길과도 사뭇 다르다. 무고한 희생에 스러져간 영혼들의 흔적이 남은 곳으로 가벼이 걸어서는 안되는 길 이기에 그렇다.

의귀마을 4·3탐방길은 현재 주민들이 거주하는 마을을 둘러보는 '신산마루 가는 길'(7km, 2시간 소요)과 토벌대를 피해 숨은 민오름 주변의 '민오름 주둔소 가는 길'(7km, 2시간 소요) 두 갈래다.

'신산마루 가는 길'의 출발점인 복지회관과 이웃한 당시 토벌대가 주둔하던 의귀초등학교. 1941년 개교한 의귀사람 뿐만 아니라 주변 마을 사람들의 배움터였다. 하지만 교육의 산실은 7년이 지난 1948년 12월 15일 폐교되며 아픈 역사현장으로 바뀌고 11일 만인 26일 육군 제2연대 1대대 2중대가 주둔하기 시작했다.

이후 17일 후인 1949년 1월 12일 새벽, 무장대가 학교를 습격하며 전투가 벌어졌다. 이때 군인 4명과 마을주민 등 무장대 51명이 숨졌다. 이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군인들은 학교에 수용중인 주민 80여명을 학교 동녘밭에서 학살했다. 이들 희생자들은 현재 현의합장묘에 안장됐다. 슬픈 역사를 지닌 학교에서 배움의 길은 걷는 어린 학생들이 앞으로 4·3의 완전 해결과 평화가 깃든 곳에서 살기를 기원하며 발길을 옮긴다.

학교를 나서 도로 한복판에 들어서면 과거 의귀마을의 번성과 자부심을 상징하는 '장판거리'가 나온다. 일제강점기 서중면 행정의 중심지로 활발한 상거래가 이뤄졌던 오일장이 섰던 곳으로 그 규모로 당시의 모습을 짐작해 본다.

아스팔트길을 따라 마을주민들이 무고하게 희생된 동녘밭에 도착한다. 그 처참한 현장을 훑어보고 시신들은 구덩이 속에서 엉켜 그 지나간 세월을 침묵 속에 잠들어야 했다.

현의합장묘 옛터이다. 그날의 울부짖는 원혼들의 절규가 들리고 안내판에 쓰인 글귀는 참혹한 당시의 모습이 눈에 그려지는 듯하다. 발걸 당시, 세월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한줌의 흙으로 돌아간 이들도 많다고 한다.

4·3길은 아스팔트를 걷는 길이지만 들리는 장소마다 저마다의 사연을 갖고 있어 마음이 아린다. 현의합장묘 옛터를 지나 의귀천을 따라 걷다보면 제주4·3남원희생자 위령비를 마주한다. 중간중간에 쉼터와 숲길, 헌마공신 김만일 묘, 삼나무숲길을 찾으며 시원 가슴을 잠시 달랜다.

이어지는 소낭(소나무)길과 편백·삼나무길, 구실잣밤나무길을 지나 잘 정돈된 현의합장묘에 들러 가볍게 목례를 하고 돌아선다. 대략 2km가량 떨어진 곳에 의귀초 전투에서 숨진 무장대의 시신이 묻힌 송령이골에 닿는다. 이처럼 동족간 이념의 대립이 가져온 희생은 너무나 크다. 평화롭게 살다 영문도 모른 채 죽임을 당한 이들의 원혼을 대신할 것은 어디에도 없는 듯하다. 다시 출발점인 마을회관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길을 마무리한다.

- 01 장판거리
- 02 의귀초등학교 동녘밭
- 03 현의합장묘 옛터와 위령비
- 04 현의합장묘



01



02



03

‘민오름 주둔소 가는 길’은 5·16도로와 남조로를 잇는 서성로변 옷귀馬(마)테마타운에서 시작된다. 남조로에서 서성로에 들어서면 오른쪽 편으로 쉽게 찾을 수 있다. 민오름을 중심으로 의귀마을 공동목장을 크게 한바퀴 둘러보는 탐방길이다. 이 곳은 ‘신산마루 가는 길’에 비하면 그나마 조금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율길 수 있다. 토벌대의 압박으로 마을 사람들이 숨어든 곳이 민오름 주변에 많다.

민오름 공동목장은 4·3 당시 토벌대가 무장대 토벌을 목적으로 영귀마루주둔소를 설치해 전방 초소로 사용하던 곳이다. 당시 토벌대가 이용했던 이맹이물이 아직도 솟아나며 애달픈 역사를 노래한다. 반대로 민오름주둔소는 1952년 100전투경찰사령부 1개 소대가 주둔하며 남아 있는 무장대를 진압하기 위해 작전을 펼치던 곳이다.

테마타운을 끼고 한적하게 나 있는 시멘트길을 걷노라면 왼편으로 화전마을을 만나는데 당시 5가구 정도가 화전을 일구면서 살았다는 안내판이 반긴다. 오른편으로는 한가롭게 풀을 뜯는 소떼들도 정겹다. 끝없이 이어지는 목장길을 따라 편백나무숲길도, 비자나무숲길도 마주할 수 있다. 나지막한 오름을 올라 전망대에 도착하면 정자에서 쉴 수도, 주변 경관을 볼 수 있다. 마을목장 내부로 야자수매트를 최근 깔아놓은 곳도 보인다.

목장길이 거의 끝나갈 무렵, 영귀를 만난다. 영귀는 마을 주민들이 은신처였다. 궤 입구가 넓어 토벌대에 발각되기 쉬워 오래 머물지 못했다는 주민의 증언이 있다. 오랫동안 피신처로 사용하지 못했지만 임시로 비를 피하고 추위를 막아줬던 소중한 역사적 장소다.

2개 코스를 모두 돌고나니 굵직한 목언의 교훈을 얻는다. 4·3의 완전 해결에 대해 앞으로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몫임을 다시한번 머릿속에 각인한다.

4·3길은 평화와 인권을 되새기는 장소이며 굴곡진 세월을 이겨온 희생자와 유가족, 도민 모두에게 ‘치유의 길’이 돼야 함을 간절히 소망한다. 붉고 흰 4·3의 상징띠가 가을바람에 흔들린다. 앞으로 무고한 희생이 없는 평화의 시간이 영원하길 염원하는 듯하다.

01 현의합장묘 가는 편백나무길

02 옷귀馬(마)테마타운

03 물나는 이맹이

제주남원 의귀마을 4·3길 탐방로

민오름 주둔소 가는 길 (7km 약 2시간)

- 1 옷귀馬테마타운
- 2 반드기왓
- 3 민오름 주둔소
- 4 화전마을
- 5 전망대
- 6 영귀
- 7 물나는 이멍이



신산머루 가는 길 (7km 약 2시간)

- 1 의귀마을복지회관(4·3길 센터) 출발
- 2 의귀초등학교
- 3 장판거리
- 4 4·3사건 당시 의귀초등학교 동녘 밭
- 5 현의합장묘(顯義合葬墓) 옛터
- 6 제주 4·3 남원 희생자 위령비
- 7 현마공신 김만일묘 입구
- 8 현마공신 김만일묘
- 9 현의합장묘(顯義合葬墓)
- 10 송령이골

創造

청소년 의정체험

오늘은 내가 도의원, 미래의 제주 내가 이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소년 의정체험 모의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신관홍)에서는 9월과 10월에
도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9개교 349명이 참여한
가운데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정체험 모의의회를
운영했다.

의정체험 모의의회는 사전에 학생별로 역할을 주고, 그 역할에 따라 도정질문은 중국인들의 토지매입과 개발 및 투자에 대해, 교육행정질문은 현행 고교 체제의 개편과 관련하여 질의·답변하였고, 학원 심야 교습시간 제한과 학생 자치법정 운영에 대한 조례안 안건상정 및 찬반토론을 통해 전자투표에 의한 의결과정은 물론, 학생들의 예절교육 및 청소년의 비만개선 방안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 등 의회 본회의의 모든 과정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의사일정

1. 도정회 운영 위원(공직자비)
2. 교육청장제 관한 청원(고교체제)
3. 학생들의 학습시간 제한 요청안
4. 제주 자치단체 운영 조례안
5. 제주 시정운영 선발전 건

16:00



한림여자중학교 의정체험 모의회의 | 2016. 10. 6



01



02



03



04

지난 1998년부터 시작된 본 프로그램은 올해를 포함해 모두 68개교(70개팀) 2,255명이 의정체험을 하면서 의회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과 함께 이해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앞으로도 본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도의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넓혀 나갈 계획이다.

참여 학교

- 01 백록초등학교
- 02 서귀포고등학교
- 03 함덕고등학교
- 04 김녕중학교
- 05 제주서중학교
- 06 한림중학교
- 07 세화고등학교
- 08 대기고등학교



05

06



07



08



創造

문화리포트

물방울 작가
김창열,
도립미술관
개관하다

글 오수정 / 정책자문위원





01



02



03

지난 9월 24일 꽃자왈을 품은 한경면 저지리에 김창열 도립미술관이 개관했다.

첫 기획전은 <존재의 흔적들>이란 주제로 2017년 1월 22일까지 전시될 예정이다. 주요 기획 내용으로는 6~70년대의 초기작품, 8~90년대의 중기작품 그리고 2000년대 이후의 후기 작품들로 구성되며 김창열 화백의 작품세계를 핵심적이고 간명하게 보여주는 데 있다.

익히 물방울 작가로 잘 알려진 김창열 화백은 평안남도 맹산 출신으로 6.25전쟁 당시 1년 6개월 정도 제주에 머물렀던 것이 인연이 되었다. 그 후 파리와 뉴욕에서 작품 활동을 하면서 사실주의 작가로서의 입지를 굳혔고, 2013년 전 생애기의 작품 중 약 220여 점을 제주도에 기증하면서 저지예술인마을에 안착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시작된 김창열 도립미술관은 2014년 4월 기공식을 시작으로 2년간 총 사업비 92억 원을 투입되어 지난 6월 준공됐다. 미술관 내부는 3개의 전시실로 구성되어 있는데, 평면을 도는 형태의 동선으로 전시 관람을 유도하고 있다. 이것은 김화백의 주요 작품 시리즈 제목인 <회귀>에서 회(回)자를 모형으로 건축 모티브를 잡았기 때문에 건축에서부터 그의 작품세계를 반영하였다고 할 수 있다.

제주에는 김창열 미술관처럼 작가의 이름을 내건 공공미술관과 전시관이 세 군데 있다. 하나는 이종섭 미술관, 또 하나는 김창열 미술관, 소암 현중화 전시관이다. 그 외에도 이름을 내세우지는 않았으나, 도립미술관에는 장리석 화백, 현대미술관에 김근수 화백 작품들이 상설전시실로 운영되고 있다.

소암 선생을 제외한 나머지 작가들은 제주에 인연을 가지고 일시 정착했던 분들로 제주의 특성을 화폭에 담아 예술적 가치로 승화시켰기에 의미 있는 전시관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미술관에서 보여주었던 연구, 사회, 교육적 기능을 예술작품과 연계시키기 위한 소통은 미비한 편이다.

새로 첫발을 디딘 김창열 도립미술관 역시 개관 전날 관장이 임명받았고, 처음부터 관여해오던 학예사는 개관 한 달을 앞두고 인사이동을 했다. 기존의 전시관과 차별점 없이 행정에서 대응하는 전문인력체계 시스템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특히나 작가 이름을 건 공공 미술관 운영은 매우 중요하다. 다양하지 못한 작품으로 인해 자칫 지루해질 수 있는 부분을 작품과 현실을 접목해서 새롭게 느낄 수 있도록 전시기획력이 바탕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작가 주변의 인물들과 시대상이 주는 사회적 역할까지도 담아내어 예술창작 체험과 예술교육 기능을 강화해 실행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작품을 통찰하는 기획력을 지닌 전문인력, 사회적 교육 기능을 가미한 조직 체계는 필수라고 볼 수 있다.

김창열 도립미술관이 제주 문화예술의 섬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면, 미술관 설립취지에 맞는 각종 소장 작품 정책 수행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해야 한다. 더불어 미술관이 지역사회의 구성원들과 창의적이고 풍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통하는 사회적 예술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01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감사패를 받는 김창열 화백
- 02 해체(Deconstruction), 캔버스에 안료, 유채, 330×250cm, 1985
- 03 회귀(Recurrence), 캔버스에 아크릴, 유채, 194×300cm, 2012

創造

제주 신당



제주의 본향당굿 - 첫번째 이야기

송당 본향당굿

글 김승연 / 제주대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사진 김기삼 작가

제주도 사람들에게는 출신지역을 함축하는 의미로써 저마다의 본향이 있다. 이곳은 자신의 선조들이 정착하여 후손을 낳아 기른 곳이라는 뜻이다.¹⁾ 설촌 조상인 마을 선주민들은 정착지를 정하고 처음 삶의 터전을 개척하는 장소를 성소로 삼았다. 이곳은 후손들에게 기억되어 마을의 주인인 신이 있는 공간으로 제향을 받는 신성한 성소가 된다. 그래서 이곳은 마을 조상이 깃든 곳으로 후손에게 제향을 받는 본향당이 된다.

이 때 마을을 설촌한 조상은 본향당신이라 하고 '토주관' 또는 '토지관'이라고 부른다.²⁾ 본향당신은 그 직능이 마을내의 토지, 산수, 나무 등이 자연의 주인임과 동시에 주민의 호적, 출산, 사망, 등 생활전반을 차지한다. 토지, 산수, 나무 등이 자연의 주인이라 하는 것은 그 지역 토지의 임자와 같은 성격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본향당신의 자손이 되어 봉제하는 단골의 의무를 정성을 다한다. 그리고 본향당에는 선대에서부터 상·중·하단골이 형성되어 마을 신앙공동체를 이룬다.

제주도 마을에서는 공동체를 바탕으로 한 본향당굿이 일 년에 네 차례, 정월의 신년과세, 이월의 영등제, 칠월의 백중제, 시월의 시만곡제의 제일을 통해 무식(巫式)의례를 올리고 있다. 이 때 본향당굿은 공동체신앙으로 전통적인 본향당신앙에 중요한 양상이 되어 나타난다. 본향당의 무속의례인 당굿에서 당과 당신, 당신본풀이는 그 존재가치가 중요해진다. 더욱이 당신의 이야기인 당신본풀이는 단골에게 종교, 철학, 역사, 윤리와 문학양상으로 나타난다.³⁾ 이러한 본향당신앙은 당신과 단골과의 관계로 신앙 형성의 고리를 이루는 무수한 당신본풀이들로 하여금 방대한 신화를 탄생 시키게 된다. 이렇게 전통적인 본향당굿의 요소로서 당과 당신, 제일, 제물과 금기, 당굿, 심방과 단골은 본향당신앙을 이루는 바탕이 된다.

- 01 제물진설 : 단골들이 정성스레 마련한 제물을 제단에 진설하고 있다.
- 02 본향당 진설 제물
- 03 각산받음 : 모든 집안 자손들의 한 해 운수를 봐주는 제차이다.
- 04 제반걸음 : 굿이 끝나면 제반을 걸어 궤에 묻는다.
- 05 초감제 : 모든 굿의 시작 부분이다. 굿청으로 신을 청해 모시는데 수심방이 맡아 진행한다. 사진은 정태진 심방





송당본향당과 당신앙

송당마을은 제주도 마을마다 하는 유교식 포제를 지내지 않고 본향당굿으로 마을제를 지낸다. 마을에서 본향당굿을 할 때는 마을 중심인 이장과 개발위원장 부녀회가 삼헌관 헌작배례로써 당신을 향해 자손으로 예를 바친다. 이렇게 송당마을은 본향당굿으로 마을제를 지내고 있어 제주도 여느 마을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송당마을 본향당굿은 제주도 무형문화재 제5호로 지정된 마을제다. 본향당 진입로는 잘 정비되어 있다. 당 왼편에 기와 건물이 있고 당굿을 할 때에 쓰이는 초석, 천막이 놓여 있다. 제단은 4단이고, 본향당신 위패가 모셔진 당집이 있다. 당집 안에 비석으로 된 위패와 나무궤가 있고 당신의 옷가지며 신발, 가락지, 비녀 등을 넣어둔다. 평소에는 궤문을 잠그고 제일에 궤문을 열어 당굿을 지낸다. 제단에는 3개의 궤가 있다. 그 위를 납작한 현무암 돌판으로 덮었다.

당신앙은 엄격하며 본향당의 제물과 금기는 과거부터 변한 것이 없어야하는 바탕에 있다. 본향당신인 ‘백주할망’은 미식신이라서 육식은 금기로 철저히 지켜진다. 따라서 제물에는 육식을 올리지 않는다.

무속생활의 음식으로 돌레떡과 둥근 시루떡, 감주, 계란, 생선, 과일 세 가지 종류, 향, 초가 있다. 정성을 더한다면 당신인 백주할망을 위한 옷 한 벌과 과거 사냥을 하러 다니던 조상을 위한 풀찌거리다. 그리고 지전 종이와 물색, 실, 운수를 보는 도십쌀⁴⁾과 비용, 액막이 할 때 필요한 시령목⁵⁾ 등 단골이 필요한 만큼 준비한다. 단골들은 부정한 몸을 깨끗하게 정화해야 본향당에 갈 수 있다. 송당본향당에 갈 때는 칠 일을 정성해야 한다. 마음까지 올바르고 깨끗함을 유지해야 금기를 지키는 것이다.

송당 본향당굿과 당본풀이

당굿의 제차는 보통, 궤문열림→열명→당굿→궤문음 순서로 진행한다. 송당 본향당굿도 심방과 단골이 당에 도착하면 궤문열림→자손열명→삼석올림→당굿 순서로 진행된다.⁶⁾

당굿을 하는데 필요한 인원은 심방과 굿의 진행을 돕는 소미와 각 연물을 맡을 소미 등 최소한 네 명 이상이다. 굿은 아침 일찍부터 단골들이 도착하여 예명을 올리며 시작되어 오후 늦게까지 한다. 심방 일행과 단골들은 굿을 하는 동안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본향당신을 청해오는 ‘본향뚝’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리고 자손으로서 당신에게 절을 올린 후에 소원된 원정을 하고 자신들의 준비한 재물을 당신에게 바치는 궤문음을 한 다음에야 음복을 한다. 본향당에서 단골들은 당신에 대해 자손인 입장으로 조심스레 정성을 다 한다.

단골들은 당신에게 정성을 다한 만큼 자신들의 소원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단골들은 각산받음을 하고 운수에 따라 나쁜 액을 물리치는 액막이를 한다. 이는 당신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다. 단골들은 정성을 한만큼의 소원을 본향당신이 들어준다는 당신앙을 가진다.

당굿의 제차인 신을 모시는 ‘오리정신청궤’에서 본향당신에 대한 본풀이가 청신하는 당신을 향해 심방에 의해 신성하게 불러진다. 이때 불리는 신의 이야기로서 ‘본풀이’가 당신의 이야기인 당의 신화다. 신에 대한 이야기며 노래로써 본향당이라는 신성하고 특정한 의례과정 속에 격식을 갖추어 불리는 신화다. 특히 신화로서 신성성을 보자면 단골의 기원을 담은 의례가 신의 화답을 바라고 있는데서 성스러움이 있다.

송당 본향당본풀이는 구좌읍 송당마을 본향당신인 ‘백주할망’과 남편인 ‘소천국하르방’ 1세대와 2세대인 자식 신들의



새도림(본향굿 전경) 굿청으로 신을 청하기에 앞서 신이 내리는 길과 제장을 정화하는 의미가 있다.



내력담이다. ‘웃손당 금벙주, 셋손당 세명주, 알손당 소로소천국, 아들이 열옴, 딸에기 스물옴, 손지 방상 삼백일흔옴’ 이라며 일컫는다. 심방이 본풀이 할 때 이 열여덟 당신들을 잘 엮어야만 당신이 ‘신나락만나락’ 해서 마을과 자손들이 편안할 수 있다는 당신앙이 저변에 있다.

‘송당(松堂)’ 마을은 제주도 신화의 뿌리라고 여겨지며 그 존재감을 가진다. 당신화에서 송당마을은 한라산을 중심으로 ‘송이송이 아들 딸 손지 방상’ 신들이 가지를 뻗

어 신의 가계를 거느린 당신의 종조다. 제주도 도처에 좌정한 ‘벙주할망과 소천국하르방’의 ‘열옴’ 아들인 송당계 당신들이 각 마을의 ‘호적, 장적, 물고, 생산’을 관장하는 당이기 때문이다.⁷⁾

이들은 당신화의 주인공으로 마을을 설촌하고 마을의 토주관

으로 좌정한다. 그리고 인간에게 제향 받는 제일을 정해 스스로 신이 된다. 이러한 과정을 이야기 하는 것을 당신의 내력담으로 마을 구비역사가 된다. 이 구비역사를 당굿을 하면서 신의 사제자인 매인심방의 말을 통해서 신성하게 노래로 불린다. 신의 이야기가 본풀이고 당본풀이를 통해 보면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밝히고 왜 이 장소에 있어야 하며 신이 되어야만 하는 필연과 제향 받을 단골을 정하고 성격에 맞는 재물을 받으며 이것이 충족되면 복을 받는 자손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벌이 내려진다는 강한 말을 한다. 당신의 엄격하고 까다로운 제안이며 흥미롭고 진지하기까지 한다.

제주도에서 본향당신앙이란 자신이 나고 자라게 해준 마을의 본향당신, 토주관에 대한 신앙이다. 제주도 사람들은 선대에서 부터 본향당신을 조상이라고 여기며 봉제를 해왔다. 자신이 태어난 곳을 떠나 타지에서 살게 될 경우 일 년 중 한번이라도 본향당 제일에 참여하는 신앙을 보인다.

제주 선민들은 이 땅에서 살아 내려면 믿음이 필요했고 그에 나타난 신앙표현이 본향당굿이다. 이것을 통해 마을 공동체를 통합하며 지연·혈연공동체를 결속하고 강화하는 공동체신앙으로써 본향당신앙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1) 본향은 태사당, 원초적인 고향, 마을의 시원이다. 그러므로 본향당신을 조상이라고 부른다. ‘본향당신’의 직능으로는 마을내의 토지, 산수, 나무 등이 자연의 주인임과 동시에 주민의 호적, 출산, 사, 등 생활전반을 차지하고 있다. 토지, 산수, 나무, 등이 자연의 주인이라 하는 것은 그 지역의 토지의 임자와 같은 성격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본향당신을 지금도 <토주관> 또는 <토지관>이라고 부른다. - 현용준, 『제주도무신의 형성』, 『탐라문화·창간호,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1982, 8~21쪽

2) 현용준, 위의 글, 17쪽 3) 현용준, 『제주도 堂神話考』,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1992, 160쪽

4) 도십쌀 : 심방으로부터 운수나 신에게 부탁할 일이 있으면 신의 의견을 듣는 수단으로 온전한 날알로 흰쌀 한 사발 정도 5) 시령목 : 무명으로 가늘게 짜여진 천

6) <당굿 재차>—초감제 : 배포도엄침-날과국섬김-자손열명-마을 연유담음-신메움-당신본풀이-새다림-도레둘러멤-젯벗제맛이굿-군문열림-분부사림→분향뿔 : 오리정신청계-본향청함(우봉지주잔)-오리정정대우-삼현관현자배레-자손소지사름-음복지주잔-군웅-일월(늘레)서우젯소리→추물공연 : 나까도전침-나까시리-지장본풀이-삼천군병지사빔-제반견고-괘문음-각산받음-도산받음→액막음-사만이본풀이-도방액-대명대춤→도진→괘문단음

7) 진성기, 『제주도 무가 본풀이사전』, 김오생 구술, 민속원, 1991초판, 2002재판, 416~417쪽7) 진성기, 『제주도 무가 본풀이사전』, 김오생 구술, 민속원, 1991초판, 2002재판, 416~417쪽



영화 '물숨' 포스터

영화 '물숨' 봅디강

글 김창집 / 소설가·제주작가회의 자문위원

고달팠단 해녀들의 삶

'물숨' 이 무슨 말인지 알아지쿠가? 들음이 체얌이라마썸? 경흐문 곱아드립주. '물질할때 물 소꿉에 들어강 쉬지 아니헿영 춤는 숨' 마썸. 그치록 오래 춤앗당 나오명사라 '호호이-' 헿명 내쉬는 건 '숨비소리' 엔 헿는 건 잘알지예.

체얌물에 들어강 놀단 때 생각안 남수강. 헿¹⁾ 중은 몰르곡 헿문, 어평헿당 헿꿈 짚은 디 빠지문 숨쉬지 못헿영 보글락보글락헿명 복먹은²⁾ 일. 조와조와 히기 시작한 때, 장난 좋아하는 선배가 쓴 세상 경험시킨다고 우티서 머릴 누르며불문 꼭 죽어점직헿엇단 기억이 떠올람신게마썸.

진짜 숨 못 쉬문 7끼영³⁾ 죽는 겁주. 경흐난 물고문이 질로 궤로운 거엔 흡디다. 경흐디도 해녀들은 이녁 식구 맥영살리쟁 헿문 질로⁴⁾ 고문을 춤으명 살아온거라마썸. 이 영화 아름다운 우도바당에서 죽을동살동 견뎌온 해녀들을 7년 동안 찍은 다큐멘타립주.

제주바당 살리기

제주에서 오십년 정도 지낸 사람 중에서 어린 때 해변에 살던 사람은 그 깨끗하던 바당을 기억할 거우다. 물이
흐뭇싸기 시작하면 돌우티 폭레광 툃, 패, 메역세, 정각. 돌 트멍더레 배려보문 깡이나 굽벵이⁵⁾, 배말⁶⁾, 대오살⁷⁾,
메옹이⁸⁾...

이번에 나온 우도 바당 소곱을 보낸 메역광 감태, 뎀⁹⁾이 휘왓하게 늘어지고, 그 스이로 자리떼가 지나가문
멜떼가 알롱알롱거리곡, 그 아래로 코생이광 어랭이¹⁰⁾가 어울렁 노는 걸 보명 용궁이 바로 여기가 아닌가
하여십주. 해너덜은 그 소곱으로 잠수호영 돌틈을 뒤지멍 구쟁기, 전복, 구살광 굴맹이¹¹⁾ 잡곡, 물꾸럭도 심곡,
히어텅기당 객주리¹²⁾, 모살 소곱에 곱은 광어나 서대도 쏘아마썸.

그걸 보명, '야, 우리 제주본섬은 어느제 저치록 좋은 바당을 잃어부러시고.' 탄식하여십주. 그동안 우리가
펜헝뎡 썬 제초제광 농약, 비료 성분이 결국은 바당으로 흘러들어갔고, 하수처리 아니뎀 오폐수도 거침웃이
들어가곡, 곳곳 양식장에서 흘러나온 물덜은 어딜 갈 거라. 갯녹음 현상이 일어난 해초가 다 죽어분 겁주.
이젠 하수처리 시설도 들어삿고, 주민의식도 점차 낮아점시난 앞으로 바당 살리는 사업도 생각하여보게마썸.

해녀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숨다히먹으멍¹³⁾ 해녀로 사는 일은 너미 힘든 일입주. 경하던 보난 젊은 사람덜은 그런 일 아니하여 보쟁 빠지곡,
늙신네덜은 나이 항 못하던 보난 수정만 줄어들엄서마썸. 옛날 못살 뎀, 바당에 가사밥도 생기고 돈도 생경,
그 돈으로 살림도 하고 조식덜 뒷바라지 헝젠 호문, 죽으나 사나 물 소곱으로 들어 갖주마는, 요즘은 스정이
달라지난 문쥬주.

경하여도 바당맛을 아는 할망덜은 주으릇호영 기회만 이시문 두통약을 먹으멍이라도 물에 드는 겁주.
바당 소곱에서 욱심을 부리문 그디가 무덤이 뉘주마는 욱망을 다시리문 아깁웃이 주는 어멍콥이 뉘뎡 호엿수다.
옛날부터 바당만 이시문 어디라도 원정 갖단 제주여인덜의 강인호 정신이 해녀문화에 짓들언 이십주.
지금 시상은 질로 지역적인 게 질로 세계적이엔 호영 독특한 문화를 알아주는 시대가 뉘단 보난,
우리 제주에서도 그런 걸 좇앙 세계유산으로 등재시키곡 그걸로 살 질을 좇아삽주.
칠머리당영등곳은 불써 등재뉘여시난 이번에 어뎡어뎡 해녀문화를 등재시키곡 다음에랑
제쥬말을 올려보카마썸. 이 영화가 해녀문화 등재에 호뭇 도움뉘여시문 호으쿠다.

제주어 풀이

1) 히다/휘다 : 해엄치다 2) 북먹다 : 물에 빠졌을 때, 허우적대며 '북물' 을 먹다 3) 꺾기다 : 물 따위를 먹을 때, 제대로 삼키지 못해 기관지를 자극하여 쉼쉼거리다
4) 질로 : 자기대로 5) 깡이/깡이나 굽벵이 : 게나 군부 6) 배말 : 삿갓조개의 일종 7) 대오살/배체기 : 거북손 8) 메옹이 : 두드럭고등 9) 뎀 : 모자란
10) 코생이와 어랭이 : 용치놀레기와 놀레기 11) 구살광 굴맹이 : 성계와 군소 12) 객주리 : 쥐치 13) 다이먹다 : 감아먹다, 닳다.

인간의 품격과 존엄 회복의 제주공동체를 위하여

글 조백기 / 정책자문위원



최근 제주시 연동의 한 음식점에서 발생한 중국인 관광객 집단 폭행사건과 중국인이 휘두른 흉기에 성당에서 기도하던 60대 여성이 숨진 사건이 잇따르면서 제주공동체 전체에 외국인 관광객, 특히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불안은 공포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도민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제주의 무사증 입국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의 ‘중국인들 안 왔으면 좋겠어요’, ‘중국인들 못 들어오게 해주세요’라는 댓글에서 단순히 중국인을 싫어하는 차원을 넘어 중국인 관광객이나 체류자에 대한 배타와 차별, 나아가 외국인혐오(제노포비아) 표현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살인사건의 원인으로 말해지는 ‘제주 무사증 입국제도’는 지난 2002년 4월 도입된 이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제주도 와 도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더불어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는 미등록체류자(불법체류자)의 증가와 쓰레기, 흡연, 무단횡단 등 기초질서 문란행위는 물론 강력 범죄로까지 이어져 이 모든 문제를 야기하는 주범으로 지목되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통계상으로는 무사증 입국제도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외국인 범죄와 미등록체류자(불법체류자)도 늘어나는 것이 사실이지만, 2009년 12월 국제이주기구와 한국정부간 협정으로 설립된 IOM이민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몇몇 강력

범죄의 경우 내국인 범죄율을 상회하고 있지만, 전체 범죄율에서는 외국인 범죄율이 내국인 범죄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외국인의 숫자가 증가한다고 외국인 범죄율도 정비례로 증가하지는 않는다.” “일반인의 인식과 달리, 각종 통계에 따르면 미등록체류자(불법체류자)의 범죄율은 합법체류자의 범죄율보다 낮게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무단횡단과 금연거리에서의 흡연, 쓰레기 투기와 같은 기초질서 위반 사례 증가하고 있으며, 그 대부분이 중국인에 의해 일어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쓰레기 무단투기와 같은 기초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무거운 과태료 및 벌금을 부과하는 싱가포르의 사례는 또 다른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싱가포르의 엄격한 법집행은 외국인 관광객에 한정되지 않고 자국민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며, 마약 범죄와 살인, 강간 등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제도와 전근대적 형벌인 태형(공장)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는 미국의 살인사건 발생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처럼 강력한 처벌의 범죄예방 효과 여부에 대해 ‘효과가 있다.’라고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관련 학계의 일반적 견해입니다. 국가의 형벌권 강화는 결국 국가권력의 강화로 귀결되어 개인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침해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방법용 CCTV 확대 설치와 지문날인제도 재도입 등 각종 논의와 대책들이 도민의 일시적이고 감정적인 분노와 비난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자칫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인권이란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이러한 인권의 보편성으로 인해 전 세계의 보편적 가치와 규범으로 보장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외국인 관광객 및 체류자의 증가는 시대적 흐름이며, 세계화에 따라 다변화된 제주사회가 가야할 길은 변화에 따른 갈등이 아니라 새로운 통합의 길입니다. 외국인은 물론 제주도민 모두가 제주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쓰레기 무단 투기와 같은 기초질서 위반행위를 삼가야 할 것이며, 제주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지식·가치·태도 등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올바른 시민성을 갖도록 민주시민교육(세계시민교육)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경제적 성장과 수익만을 쫓는 우리 자신의 탐욕의 질주를 멈추고 인간의 품격과 존엄을 회복해야 한다는 한 종교지도자의 성찰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억울하게 생을 달리하신 고인의 죽음과 유가족의 아픔에 화답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Hot issue

지진대피 요령



지진발생 시 10가지 행동요령

1. 집 안에 있을 때

- 테이블 등의 밑에 들어가서 몸을 보호합니다.
- 자신과 가족의 안전이 최우선
-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길어야 1~2분 정도!
- 불이 났을 때 침착하고 빠르게 불을 끌 것
-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



2. 집 밖에 있을 때

- 야외에서는 머리를 보호하고 위험물로부터 몸을 피하자.
- 블록 담이나 대문 기둥 등에 가까이 가지 말 것
- 가방이나 손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
- 낙하물, 블록담 주의!



3. 백화점, 극장, 지하상가 등에 있을 때

- 안내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
- 큰 혼란을 일으키지도 말고 휩쓸리지도 말자.
-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면서 대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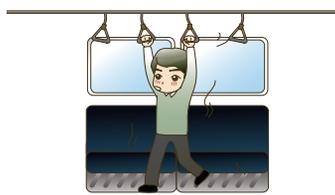
4.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을 때

- 지진이나 화재 발생시 엘리베이터를 타면 안됨
-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을 때는 모든 버튼을 눌러, 신속하게 내린 후 대피
- 만일 갇혔을 경우에는 인터폰으로 구조를 요청



5. 전철을 타고 있을 때

- 손잡이 등을 꼭 잡아서 넘어지지 않도록 함
- 차내 방송에 따라 침착하게 행동



6.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을 때

- 교차로를 피해서 길 오른쪽에 정차
-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고 경찰관 지시에 따라 행동



7. 산이나 바다에 있을 때

- 산 근처나 급한 경사지에서는 산사태나 절개지 붕괴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한 곳으로 대피
- 해안에서는 지진해일 특보 발령 시 지역의 안내방송 등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대피



8. 부상을 입은 사람이 있다면

- 부상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적절한 응급처치를!
- 평소에 응급처치 지식을 배워둡시다.



9. 피난은 마지막 수단

- 대피권고가 나면 서로 협력해서 대피합니다.



10. 올바른 정보에 따라서 행동

- 라디오나 방재기관에 의한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



Hot issue

청탁금지법, 이렇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소위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이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글 강인태 / 법제심사담당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공직사회는 물론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조금씩 변해 가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에는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우리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종전과 다른 생활방식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현실에 조금 불편해 질 수밖에 없다. 때로는 지인들과의 만남이 조심스럽고 심지어 꺼려질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불편함을 감수해서 보다 청렴한 세상,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다면, 그리고 부정청탁이나 금품 등의 수수로 인해 우리 자녀들이 정당하게 누려야 할 권리가 빼앗기지 않고 누구나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고 이런 세상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 줄 수 있다면, 지금의 조그만 불편쯤이야 얼마든지 감수할 가치가 있지 않을까.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은 크게 1. 법률 적용 대상, 2. 부정청탁의 금지, 3. 금품 등 수수 금지 4. 징계 및 벌칙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에 대해 살펴보면, 이 법의 적용 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

-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
- 각급 학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언론사

또한,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자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로서 다음과 같다.

- 공직자 등 :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둘째, 부정청탁 금지에 관한 사항인데,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행위유형을 다음과 같은 14개의 대상 직무를 법령을 위반해 처리한 것이라고 구체화하고 있다.
- 공직자 등의 배우자
- 공무수행사인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 공무수행사인의 유형(4개) :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 / 공공기관에 파견근무하는 민간인 / 심의·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 등
- 일반 국민 :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민간인

둘째, 부정청탁 금지에 관한 사항인데,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행위유형을 다음과 같은 14개의 대상 직무를 법령을 위반해 처리한 것이라고 구체화하고 있다.

- | | |
|---------------------------------|----------------------------------|
| ① 인·허가·면허 등 처리 직무 | ⑧ 보조금·기금 등의 배정·지원 또는 투자 등에 관한 직무 |
| ②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의 감경·면제 직무 | ⑨ 공공기관의 재화 및 용역의 거래 관련 직무 |
| ③ 채용·승진 등 공직자 등의 인사에 관한 직무 | ⑩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 등 관련 직무 |
| ④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의 선정·탈락 직무 | ⑪ 병역 관련 직무 |
| ⑤ 각종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 직무 | ⑫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관련 직무 |
| ⑥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에 관한 직무 | 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관련 직무 |
| ⑦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 관련 직무 | ⑭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 등 관련 직무 |

한편, 청탁금지법은 국민의 정당한 권리주장 위촉방지를 위해 공개적인 방법으로 청탁하는 경우 등 다음과 같이 7가지 부정청탁 예외사유를 두고 있다.

- ①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기준(제2조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② 공개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③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해 제안·건의하는 행위
- ④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해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 ⑤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 ⑥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해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 ⑦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셋째, 공직자 등과 그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금지이고 그 유형은 다음과 같다.

- ① 공직자등이 동일인으로부터 직무 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
- ② 100만 원 이하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직무와 관련한 금품 등 수수 시 과태료 부과 대상
- ③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공직자 등과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했고, 만약 공직자등이 이를 알고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 역시 처벌 및 과태료 대상

한편, 청탁금지법에는 다음과 같이 8가지의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 등을 규정하고 있다.

- ①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 등이나 파견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 ②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 ③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 ④ 공직자 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⑤ 공직자 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 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 ⑥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 ⑦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해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 ⑧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또한, 공직자 등에게 직무와 관련해 요청받은 외부강의 등의 사전 신고의무를 부과(지방의회의원의 세미나, 토론회, 강연 등에도 적용)하고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사례금은 신고 및 반환하도록 하고 있으며, 만약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최초 1시간 기준	도지사	부지사	4급 이상 공무원	5급 이하 공무원
	40만원	30만원	30만원	20만원

※ 사례금 총액 한도는 강의시간에 상관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이하
 ※ 도의회 의장은 도지사와 같고, 상임위원장 및 도의원은 4급 이상에 해당

넷째,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경우 징계와 벌칙은 다음과 같다.

유형	위반행위	제재수준	
부정청탁 금지	공직자 등에게 직접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제재 없음	
	공직자 등에게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자	공직자 등을 제외한 일반인 공직자 등	2천만원 이하 과태료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		3천만원 이하 과태료
금품 등 수수 금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 초과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 등 *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 또는 반환(인도)하지 않은 공직자 등 * 금품 등을 공직자 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몰수·추징 대상)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 원 이하의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 등 *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 또는 반환(인도)하지 않은 공직자 등 * 금품 등을 공직자 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수수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외부강의 등 초과사례금을 수수한 후 신고 및 반환을 하지 아니한 공직자 등	500만원 이하 과태료	

고령화 사회의 건강 전략

글 강형윤 / 가정의학과 전문의



현대 한국사회를 특징짓는 이름 중의 하나가 고령화 사회다. 국민의 평균수명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이니 이는 축복이다. 그러나 사는 것보다 못한 여생을 보내며 고생을 하는 노인들이 많은 것 또한 현실이다. 그렇다면 의학의 발달과 문명의 혜택으로 얻어낸 평균수명의 연장이라는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은퇴 후 주어지는 제2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려면 어떠한 것들이 필요할까?

하나는 경제적인 준비일 것이다. 기본 생활비에 더해 나이가 들면서 급격히 늘어나는 의료비의 지출은 성공적인 노후에 대한 커다란 도전이다. 노인 빈곤층이 되어서는 절대 행복해질 수 있지 않겠는가?

또 하나는 자신의 건강에 대한 효율적인 전략이다. 젊어서 우리는 누구나 건강에 대해 자신을 하며 살아간다. 반면에 나이 들어서는 누구도 자신하지 못하는 것이 건강이다. 그럼에도 노후 건강에 대한 전략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은 거의 발견하지 못했다. 그냥 그렇게 닥쳐오면 맞히고 견디기에는 주어진 시간이 최소 10년 이상으로 길어졌음에도 말이다. 지금부터라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인지기능과 육체 기능의 유지를 위해 애써 노력해 볼 일이다.

신체기능의 유지 및 증진

요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노후대책은 주로 경제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과연 그럴까? 호주머니만 든든하면 내 노후는 행복할까? 돈보다 더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신체 기능이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노후를 위해서는 보험이나 연금을 준비하듯 젊어서부터 신체기능을 증진하려 노력해야 한다.

암의 조기 발견

우리 주위에 암을 예방하기 위한 음식이나 생활습관 등 온갖 비법들이 많이 떠돌아다닌다. 그러나 아무리 피하려 해도 오래 살면 살수록 암의 발병률은 당연히 증가한다. 즉 암에 걸리는 것은 장수에 대한 대가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문제는 암으로 인한 사망이나 심각한 후유증을 어떻게 막느냐는 것인데 다행히 너무 늦지 않게 발견할 수만 있다면 가능하다. 현대 의학이 그 정도는 된다. 그뿐만 아니라 조기에 진단한다면 완치시킬 수 있는 암들도 있다. 그러므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암을 조기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대사성 질환들의 성공적인 관리

나이가 들면서 발병 빈도가 증가하며 암보다도 더 흔히 우리가 알게 되는 질환들도 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의 대사성 질환들이다. 이런 질환들은 완치를 시킬 수 없고 오직 조절만이 가능한 질환들일 뿐 아니라 드물지 않게 심각한 합병증으로 삶을 파괴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대사성 질환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법을 익히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즉 오랜 친구처럼 살살 어르고 달래며 평생을 같이 데리고 살아가 각오와 요령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스트레스에 대한 현명한 대처

<나이가 들면 애 같아진다.>는 말이 있다. 노인들의 심한 감정 기복을 일컫는 이야기다. 쉽게 화내고 빠치고 슬퍼하는 이런 특성은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할 뿐 아니라 본인의 건강과 삶의 질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여기에 더해 가해지는 갑작스러운 스트레스는 노인들에게 매우 위험해서 심장마비나 뇌졸중뿐 아니라 노인 우울증과 이로 인한 자살의 빈도도 증가시킨다. 그러므로 스트레스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을 익히는 것도 성공적인 노후를 위한 중요한 자산이다.

평균 수명이 늘었다고 마냥 좋아하기만 할 일도 아니고, 산다는 것이 다 사는 것도 아니지 싶다. 고령화 사회를 사는 우리는 항상 이 경구를 되새기며 성공적인 제2의 인생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해바라기를 하며 지나온 세월을 흐뭇하게 음미하거나, 허연 백발을 흘날리며 여행길에 만나는 경이로운 풍경을 카메라에 담는 내 모습을 꿈꿔보자. <난 할 수 있어>라 중얼거리며.



Information

임대차 계약 시 유의사항

제주살이는 현실입니다

글 김지현 / 정책자문위원



제주는 타지 사람들에게 꿈같은 곳이다. 아름다운 섬의 풍경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설레고 마음이 평화로워진다. 그런데, 제주에 정착하는 과정은 평화롭지만은 않은 것 같다. 최근 몇 년 사이 전국에서 부동산 가격이 가장 급격하게 상승한 제주에서 거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청년들은 월세나 전세계약을 하게 되는데, 임대차 계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

청년 A의 사례를 통해 임대차 계약 시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보자.

청년 A는 제주에서 살기 위해 먼 길을 떠나왔다. 대출금리가 저렴하기 때문에 귀하다는 전세 물건을 찾아 나섰고, 드디어 마음에 드는 다가구 주택을 발견했다. 누구보다도 먼저 계약하기로 마음먹은 A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불안하다.

이 경우 A는 계약 전에 등기부 등본을 필히 확인해야 한다. 임대인(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부동산 매각대금에서 먼저 등기된 은행 담보대출 등이 우선 변제되므로 그 금액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건물의 시세가 등기된 선순위 채무액 및 A의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보다 높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동산 가격이 급락할 위험이 있다면 전세계약 자체를 재고해야 한다.

한편, A는 전세권 등기를 꼭 설정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전세권을 등기하면 등기부에 순위가 설정되고,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건물 매각대금은 등기부의 순위에 따라 변제된다. 그런데, A의 임대인은 전세권 등기는 할 수 없다고 못 박아 당황스럽다.

전세 등기는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설정할 수 없지만, 이 경우에도 A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전입신고)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는 전세 등기와 마찬가지로 매각대금에서 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변제받도록 하고 있다. 전세권 등기 설정에 비해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건물뿐만 아니라 대지 매각대금에 대해서도 변제받을 수 있어 유리하다. 그러나, 등기된 전세권자와 달리 지급명령이나 소송 등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아야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A는 등기부 등본을 살펴본 결과 해당 다가구 건물에 1순위로 설정되어 있는 은행의 근저당권 담보금액이 과다하여 2순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결국 임대인과 협의하여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를 지급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월세의 경우에도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거주하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전입신고만 하더라도 소액임차인에게는 매각대금의 1/2 범위에서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데, 현재 제주도의 경우 보증금 5,000만 원 이하의 소액임차인은 1,700만 원까지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선순위 담보설정일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최우선변제권을 가진 자는 등기된 선순위 권리자보다도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A는 은행보다 먼저 보증금 1,000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이상 청년 A의 사례를 통해 임대차 계약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다. 대부분의 경우 신속하게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다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 제주도에서는 전세매물을 찾기 어렵지만, 신축 빌라의 입주시기에는 공급물량이 많아 전세도 구할 수 있다. 안심형 버팀목전세금대출이나 대한주택보증 또는 서울보증보험에서 운영하는 전세금 보증보험을 이용하면 전세금 반환을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조건에 부합한다면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Fact check

사실은 이렇습니다



선거구 획정 문제는 '밥그릇 챙기기' 아닌 '비정상적 정상화' 그 자체

2018년 6월 13일 실시될 제7회 지방의회 의원선거를 앞두고 제주도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획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2일부터 제주도정은 선거구획정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도의회 의원 선거구조조정 실무 TF'를 구성하여 첫 회의를 가지고, 관련 쟁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도의회는 실무 TF팀 구성이 아닌 법정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운영이 우선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선거구획정 문제는 결국 도의원 정수를 늘리기 위한 '제 밥그릇 챙기기'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 일부의 부정적 여론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도议원의 제 밥그릇 챙기기'가 아닌 '비정상을 정상화'해야 하는 도의원의 책임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55만여 명에 불과하던 도민 인구가 2018년 8월 현재 63만여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총 4,537건의 중앙정부의 권한 및 사무의 이양을 통해 자치분권 구현 및 핵심산업 육성기반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는 했지만, 실제 늘어난 도지사의 권한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도의회의 권한과 위상은 정체되어 있고, 도민사회의 현안과 갈등 해결을 위한 업무 과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변경으로 인해 시급히 선거구획정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바로 위험적 상황의 해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일부 선거구의 경우 헌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인구편차 상하 60%와 인구비례 4:1의 기준을 넘어서 도민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는 위험적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도의회 의원은 제주도민의 대표기관이자 제주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입법기관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솔선수범하여 헌법과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도지사에게도 마찬가지로 주어진 의무입니다. '의원정수를 몇 명으로 확대한다', '비례의원 비율을 조정한다',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한다 안한다'라는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에는 이들 사항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입니까? 바로 도지사입니다. 제주특별법 제38조와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에서 도의회 지역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해 도지사가 도의회 2명, 선거관리위원회 1명,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각 2명씩 추천 총 11명의 도의회 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의회 의원의 지역선거구 조정 및 의원정수 조정 등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여 그 보고서를 늦어도 도의원선거의 선거일(2018.6.13) 전 6개월(2017.12.12)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도정에서는 다시금 비법정기구인 실무 TF팀을 구성·운영해 그 실질적 논의를 늦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무 TF팀이 어떤 권한으로 무엇을 결정하겠다는 것인지 모를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그 역할을 법정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넘겨야 합니다. 만에 하나 실무 TF팀이 어떤 역할을 해야겠다고 한다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논의하는데 필요한 관련 기초자료를 수집·조사·분석하는 등의 실무준비를 하는 것 정도에 한정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연말 늦어도 내년 1월초에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합니다. TF팀 구성으로 선거구획정의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선거구획정 문제와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도지사께서는 조속히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러한 쟁점과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폭넓은 여론수렴과 민주적 절차를 통해 개편안에 대한 정당성과 도민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제주는 세계 그 어느 곳보다 빠르고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서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변화된 상황을 잘 반영하여 보다 나은 제주미래를 위한 논의결과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실

THE YOUNG ARTIST OF JEJU



제주의 젊은작가 | 김시현



비개인 오후_아크릴거울에 유화물감_120x50cm_2015

어느날 해안가를 따라 거닐다... 물속에 비친 풍경을 보고 감탄을 하였다.

그 속에는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는 제주의 돌담과 집들이 물결에 흔들거리고 있었다.

그것을 보며 제주 풍경의 아름다움이 자연 그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알록달록 지붕이 덮여 있는 집들과 울망줄망 쌓여 있는 돌담들의 모습이 어우러져 나타나는 광경 또한 제주만의 독특한 아름다움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바다와 어우러지는 돌담과 집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작품의 소재가 되었다.

내가 거울에 작업을 하는 이유

여백에 비춰지는 관람객의 모습이 작품의 한 부분이 되어 내가 느꼈던 아름다움의 일부라도 전해지길 바라고, 혹은 관람객 각자의 감성에 의해서 또 다른 이야기로 재해석되길 바란다.

행복 제주

도민 체감도를 높이는 공감의정, 배려와 협력의 소통의정,
특별자치도를 선도하는 창조 의정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 만들기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도민이 행복해야 제주가 행복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위 63119 제주시 문연로 13 TEL 064.741.2222 FAX 064.741.1999